노동자 연대

ws.or.kr

Workers' Solidarity "만국의 노동자여, 단결하라!"

제518호 | 2024년 9월 4일 ~ 9월 24일 | 값 1,000원

우파 의원들과 협력하는 반낙태 보수파
2면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
3, 16면

윤석열의 국민연금 개악안 비판
6~7면

텔레그램 창업자 체포 배경
7면

딥페이크 성범죄
8~9면

독일 파시스트 정당, 튀링겐주 선거에서 1위
10~11면

딥페이크 보수·우파의 말을 다 믿지 말라

관련 기사 8~9면

※ 추석 연휴 관계로 9월 11일과 18일에 종이 신문을 발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기간에도 온라인 기사들은 수시로 발행됩니다.

임신중지 규제 입법 위해 우파 국회의원들과 협력하는 보수파들

8월 28일, 국민의힘 의원 조배숙 · 조정훈 의원이 행동하는프로라이프,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합동)와 함께 '우리 사회의 태아생명 보호 어떻게 할 것인가?'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토론회는 '36주 낙태' 사건을 계기로 임신중지를 대폭 규제하는(사실상 금지하는) 입법을 위한 사전 정지 작업의 일환이었다. 또, 반낙태 보수파가 결의를 다지는 자리이기도 했다.

토론회에는 120여 명이 참가했다. 국민의힘(국힘) 전 당대표 김기현, 전 원내대표 윤태옥, 당대표 후보였던 윤상현, 국회 법사위 간사 유상범, 6선 의원 조경태 등 국힘 중진 의원과 간부급 인사 15명도 참가했다. 당대표 한동훈과 원내대표 추경호는 축사를 보냈다. 이 때문에 토론회 참가자들은 한껏 고무돼 보였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교단 총회장 오정호 목사는 이렇게 말했다. "하나님의 전사인 조배숙 의원을 비롯해 국민의힘 15명의 의원님들을 이 자리에 오도록 하는 우리의 파워가 바로 이렇습니다!"

정부의 '36주 낙태' 공격을 계기로 반낙태 보수파가 자신감을 얻고 여당의 주요 간부들을 끌어들여 협력을 구축하고 있음을 보여 주는 모습이었다.

한동훈은 보내 온 축사에서 "영아 살해 수준에 가까운 낙태가 곳곳에서 이뤄지고 있고, 의사 처방 없이 낙태약이 판매되는 일도 번번하게 벌어지고 있"다며 "생명 존중이라는 우리 사회의 근본 가치를 지키기 위해 지금 당장 행동해야"한다고 말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조배숙은 "태아 생명 보호"를 위한 입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결의를 다졌다. 조배숙은 보수 복음주의 정치인과 법률가로 구성된 복음법률가회의 상임대표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미국 프로라이프 운동이 로비를 통해 공화당을 끌여들여 성공했듯이, 한국에서도 국민의힘 등 보수 정치인들을 적극 조직해야 한다는 강조도 있었다.

모든 임신중지 반대

보수 복음주의자인 세미나 발표자들은 '36주 낙태' 사건에 대한 사회적 공분이 크다는 점을 이용해 임신중지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자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들이 반대하는 것은 단지 후기 임신중지만이 아니다. 이들은 모든 임신중지를 반대한다.

발제자인 성산생명윤리연구소 소장 홍순철은 모자보건법 제14조에서 허용하는 임신중지 사유(태아의 심각한 질환, 강간으로 인한 임신, 근친 관계 임신 등)도 전부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신부의 생명이 위태롭지 않은 한, 심지어 강간을 당해 임신하더라도 무조건 출산하라는 것이다!

토론자인 한국기독교생명윤리협회 상임대표 이상원은 "태아는 수정 또는 임신 순간부터 영혼을 가진 독립된 인간 생명"이라고 강조했다.

사진 전주현

생명 운운하며 여성의 몸을 통제하려는 보수주의자들. 8월 28일 반낙태 토론회

그러나 태아는 모체에 전적으로 의존해야만 하는 모체의 일부로 독립된 인격체가 아니다. 태아 '생명권'을 운운하면서, 원치 않는 임신을 한 여성에게 출산을 강요하는 것은 오히려 여성을 독립적 인격체가 아니라 아기 낳는 도구로 취급하는 것과 다름없다. 이것은 여성의 자기 결정권에 대한 완전한 부정이다.

무엇보다 임신중지 규제는 여성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한다. 임신중지 규제는 수많은 여성들을 안전하지 못한 낙태로 내몰거나 값비싼 낙태 비용을 감당하느라 고통스럽게 만들었을 뿐이다.

8월 26일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발표한 연구조사에 따르면, 해바라기센터(성폭력 피해자 지원센터)가 설치된 병원의 약 30퍼센트가 임신중절 수술을 하지 않아서 성폭력의 피해자들이 수술할 병원을 찾느라 임신 후기까지 내몰리거나 불법 낙태약에 노출되는 사례가 늘었다고 한다.

민주당 약점 찌르기

한편, 토론회에서는 반낙태 진영이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의 약점을 찌를 방안도 논의됐다.

한 발표자는 '민주당도 선거와 여론을 의식하기 때문에 36주 낙태 문제는 좌시할 수 없다고 생각할 것'이라고 했고, 조배숙도 '헌재의 결정은 낙태죄를 유지하되 허용 가능한 임신 주수를 고민하는 것이므로 이런 취지를 민주당이 뛰어넘을 수 없다'고 말했다.

온갖 거짓과 위선 속에서도 한 가닥 진실을 얘기한 셈이다. 민주당 자체든 그 의원들이든 정부의 36주 낙태 공격에 대해 여태 아무런 입장도 내지 않고 있다. 게다가 조배숙은 민주당을 통해 정계에 입문하고 민주당 의원으로도 활동했던 정치인으로 그 당의 생리를 잘 알 수 있다.

이는 역으로 임신중지권 옹호 세력이 민주당에 기대서는 안 됨을 보여 준다.

이날 토론회는 윤석열이 다시 우익 본색을 드러내는 것에 발맞춰 반낙태 진영이 전열을 가다듬고 임신중지 규제 입법에 나설 것임을 보여 줬다.

임신중지에 대한 실질적 필요와 지지 여론 때문에 정부 · 여당이 당장 임신중지 일반을 공격하는 건 쉽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반낙태 보수 · 우파들의 운동이 활성화되면 정부 · 여당도 더 적극성을 보이며 이를 우파 결집의 수단 중 하나로 삼으려 할 수 있다.

윤석열 정부의 후기 임신중지 공격과 반낙태 보수파의 데마고기에 맞서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확고하게 옹호해야 한다.

전주현

독자·지지자들의 구독료와 후원으로 발행하는 좌파 주간 신문

노동자 연대 정기구독/후원하세요

정기구독료: 연 50,000원

입금 계좌 (예금주 ㈜ 레프트미디어)
국민은행 020601-04-080896, 농협 301-0010-1643-71

※ 웹사이트에서 신용카드 · 핸드폰 결제 가능

ws.or.kr/subs2

구독 문의: 02-777-2792, wspaper@ws.or.kr

온라인에서 만나 보세요
새 기사가 계속 업데이트됩니다
ws.or.kr/online

"노동자 연대" 검색
스마트폰 앱으로 만나 보세요
"노동자 연대" 검색 텔레그램 '노동자 연대 알리미'

아침에 읽는 〈노동자 연대〉
매일 아침 7시 30분 이메일로 기사를 배송해 드립니다.
〈노동자 연대〉와 함께 힘차게 하루를 시작하세요!

발행인: 김인식 편집인: 김인식 사업자 명칭: (주)레프트미디어 제호: 노동자 연대
발행연월일(창간호): 2009년 3월 14일 인쇄인: (주)디엠코리아 현재오 등록번호: 서울다08179 〈주간〉
등록연월일: 2009년 1월 12일 주소: 서울시 성동구 하왕십리동 946-16 4층
전화: 02-777-2792 제보: 02-777-2791 팩스: 02-6499-2791 email: wspaper@ws.or.kr
ISSN 2005-8217

또다시 반네타냐후 시위에 직면한 이스라엘 정부

팔레스타인 연대에 박차를 가하자

찰리 킴버

많은 국내 언론들은 최근 이스라엘에서 분출한 반정부 시위가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기대를 표한다. 8월 31일 〈한겨레〉 토요판은 이스라엘 시위 사진으로 1면을 메우고 그 시위를 집중 보도하기도 했다. 그러나 반정부 시위대는 네타냐후가 군사 작전에만 의존해서 포로를 구출하는 것에 반대하는 것이지 팔레스타인 인종청소 자체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아래 기사는 희망은 이스라엘 내에 있지 않다는 점을 살펴본다.

사진 출처 @bringhomenow (X; 옛 트위터)

반네타냐후 시위로 정부가 곤란해졌지만, 이스라엘 내부에서 희망을 찾을 수는 없다

지난해 10월 7일부터 하마스에게 잡혀 있던 포로들 중 이스라엘인 6명이 사망한 사건으로 인해 베냐민 네타냐후가 또다시 위기에 직면했다.

네타냐후에 맞선 대규모 시위와 총파업이 벌어졌다. 네타냐후가 휴전과 포로 교환 협상을 맺지 않는다고 이스라엘인 포로 가족 단체들이 규탄하고 나선 것이 그 계기였다.

포로 가족 모임이 발표한 성명서는 이렇게 규탄했다. "네타냐후가 인질들을 저버렸다! 이제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어서 그 성명서는 이렇게 촉구했다. "내일부터 온 나라가 뒤흔들릴 것이다. 우리는 행동을 준비할 것을 대중에게 촉구한다. 우리는 이 나라를 멈출 것이다."

하마스는 포로를 자신들이 죽이지 않았다고 부인했고, 사망자 중 최소 세 명은 최근 휴전 협상에 따라 교환될 예정이었지만 이스라엘의 완고한 태도로 협상이 결렬됐다고 밝혔다.

한 이스라엘 고위 관료도 이를 〈텔레그래프〉지에 확인시켜 줬다. 사망한 포로들 중 "허시, 카멜, 에덴은 7월 2일 바이든이 제시한 휴전 협상안에 따라 석방될 포로 명단에 모두 포함돼 있었다. 그들은 우리가 살릴 수 있는 사람이었다."

9월 1일 저녁 이스라엘의 텔아비브에 대규모 시위대가 모여 하마스와의 협상을 촉구했다. 노동조합 연맹인 히스타드루트는 9월 2일 월요일부터 전국 총파업 지침을 내렸다. 히스타드루트는 언제나 이스라엘 국가를 지지해 오고 정착민 식민 지배를 구축하는 데서 중요한 구실을 한 조직이다.

이스라엘 재무장관 베잘렐 스모트리치는 시위대와 노동조합 지도자들이 "하마스 수장 신와르의 꿈을 실현시켜 주고 있다"고 비난했다. 네타냐후 지지가 강력한 여러 도시들과 정착촌들은 파업에 동참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지난 20년간 여러 차례 하마스를 상대한 이스라엘 측 협상가 거숀 배스킨의 폭로도 네타냐후에게 타격을 줬다.

지난 8월 31일 배스킨은 엑스(옛 '트위터')에 이렇게 썼다. "약 2주 전 인질 가족 모임에게서 자신들을 대표해 직접 하마스와 협상에 나서 달라고 요청받았다. 나는 그 요청에 응했고, 2주가 채 안 돼 3주 동안 실행될 협상안을 따냈다. 이스라엘인 인질 107명을 전원 석방하고, 전쟁을 끝내고, 이스라엘군을 가자지구에서 철수시키고, 석방할 팔레스타인인 수감자들의 수와 명단을 합의한다는 내용이었다.

"하마스 지도부는 전원이 협상안의 윤곽에 동의했다. 그러나 우리의 네타냐후는 전쟁을 끝내기를 바라지 않는다. 이것이 지금의 상황이다."

네타냐후는 더 많은 살상을 약속하는 것으로 응수했다. 9월 1일 네타냐후는 하마스 지도자들을 향해 이렇게 말했다. "너희를 추적하고 잡아내서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다."

네타냐후가 이스라엘 내부의 갈등으로 곤경에 처한 것은 반가운 일이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시위대는 팔레스타인인들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시온주의 국가에 문제를 제기하지는 않는다. 이스라엘 야당들이 네타냐후에 맞선 운동을 지지하는 것은 거기에서 집권에 이르는 길을 포착했기 때문이다.

이스라엘에서 이런 혼란상이 펼쳐지는 것은 팔레스타인인들의 저항을 분쇄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스라엘이 유혈 낭자한 공격을 시작한 지 거의 11개월이 됐는데도 팔레스타인인들의 저항은 분쇄되지 않고 있다. 이제 이스라엘 국방장관 요아브 갈란트는 네타냐후가 합의를 제때 이루지 못한다고 신랄하게 비난하고 있다.

이번 네타냐후 반대 시위와 때를 같이해 이스라엘은 서안지구에서 지난 20여 년 이래 최대 규모의 공격을 감행하고 가자지구에서 무자비한 학살을 지속하고 있다.

9월 1일 이스라엘은 가자시티 자이툰 지구에서 피난민들이 머무는 사파드 학교를 폭격해 팔레스타인인 최소 11명을 숨지게 했다.

서방의 주류 언론 〈블룸버그〉는 최근 이렇게 보도했다. "이스라엘의 폭격으로 가자지구에는 4200만 톤 이상의 잔해가 쌓였다. 이를 덤프트럭에 실으면 그 트럭들의 행렬이 뉴욕에서 싱가포르까지 이어질 것이다.

"게다가 그 잔해를 치우는 것은 불발탄과 위험한 오염 물질, 잔해에 깔린 시신들로 인해 더 까다로운 일이 될 것이다."

팔레스타인인들의 반란과 아랍 정권들에 맞선 혁명, 서방과 친서방 나라에서의 연대 운동과 노동자들의 행동이야말로 팔레스타인 해방의 핵심 기둥이다. 해방은 이스라엘 내부에서 오지 않을 것이다.

이스라엘 노동자들의 투쟁에 의지하지 마라

이스라엘에서 기업주들과 노동자들의 전투가 벌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는 일반적인 자본주의 계급 분단선을 중심으로 한 싸움이 아니다.

그보다는 팔레스타인 땅을 약탈하는 정착민 식민주의의 이익을 어떻게 배분할지를 놓고 벌어지는 싸움이다. 히스타드루트, 즉 '이스라엘 노동자 총연맹'은 일종의 노동조합 연맹이다.

그러나 히스타드루트는 정착민 식민주의를 확장하는 수단으로써 1920년에 창립됐고, 초기 일부 시온주의 정착민의 핵심 조직화 기구였다. 히스타드루트는 키부츠를 세우는 데 일조했다. 키부츠는 팔레스타인인들의 땅을 빼앗아서 만든 농장이다.

히스타드루트가 설립한 군사 조직 하가나는 아랍인들을 강제로 내쫓고 학살하는 데서 중요한 구실을 했다. 히스타드루트의 주요 목표 하나는 팔레스타인에 온 유대인 정착민이 아랍인의 노동이나 상품에 의지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었다.

히스타드루트 조직원들은 시장에서 아랍인들의 판매대를 박살 내고, 아랍인들의 생산물을 파괴하고, 과수원에서 일자리를 얻으려는 팔레스타인인들에 대한 폭력을 조직했다. 이런 폭력은 이스라엘이 아랍 노동력에 일정 수준 이상 의존하지 않게 하려는 시온주의 프로젝트의 일환이었다.

오늘날 팔레스타인인들은 여전히 2등 노동력으로 취급돼 가장 임금이 낮고 불안정한 일자리에서 일한다.

출처 Charlie Kimber, 'Step up support for Palestine as Netanyahu faces mass protests' (2024. 9. 01) / 번역 이원웅

심지어 한일 군사 동맹 구상하는 윤석열 정부

8월 27일 김선호 국방부 차관이 국회에서 한 · 일 상호군수지원협정(ACSA · 악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상호군수지원협정은 한국군과 일본 자위대가 유사시 무기와 연료를 주고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도 가능해진다.

그런데 김선호는 반나절 만에 급히 "정부 차원에서 검토하지 않고 있다"며 말을 바꿨다.

그러나 한 · 일 군사 협력 수준을 질적으로 높인 지난 7월 말 한 · 미 · 일 안보협력 프레임워크 이후, 한일 ACSA 추진이 예정된 수순이라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이명박 정부 때 밀실에서 한일 ACSA 협상을 주도했던(그러나 당시에는 반대 여론에 부딪혀 중단됐다) 인물이 현 정부 안보 정책 실세라는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1차장 김태효이다.

만약 한일 ACSA가 체결된다면, 윤석열 정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ISOMIA · 지소미아)을 공식 정상화한 것과 더불어 한일 군사 동맹의 출발 단계가 될 것이다.

우파들은 한일 동맹 반대를 "철 지난 일본 과거사 콤플렉스" 따위로 묘사한다. 그러나 한일 동맹에 대한 반감과 불안감은 역사 정의에 대한 정당한 문제의식과 더불어 바로 오늘날 제국주의 전쟁의 위험 때문이다.

현재 일본의 군사력 증강과 미국과 손잡은 제국주의적 진출 심화는 격화되는 미 · 중 갈등과 깊이 맞물려, 인도 · 태평양 지역을 매우 위험하게 만들고 있다.

사진 출처 해군

4월 11일 제주 남방 공해상에서 실시된 한미일 해상훈련

8월 30일 일본 방위성이 2025회계연도 방위비 예산으로 역대 최대인 8조 엔(약 73조 3000억 원)대를 요청하자, 중국은 정찰기나 측량함으로 일본 영공 · 영해를 침범해 외교 갈등이 일어나고 있다.

중 · 일 간에는 대만 일대나 댜오위다오(일본명 센카쿠) 열도의, 우크라이나만큼이나 잠재적으로 위험한 뇌관들이 도사리고 있다.

이번에 국방부 차관이 ACSA에 관해 논란이 일자 급히 말을 바꾼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실제로 한일 군사 동맹을 추진하는 과정은 모순이 적잖을 것이다.

여론의 반발뿐 아니라 경제적 관계가 깊은 중국의 반발도 고려해야 한다.

최근 윤석열 정부가 뉴라이트 인사를 중용해 한미일 군사 동맹을 이데올로기적으로도 뒷받침하려 하지만, 그런 방향은 또 다른 정치 위기를 낳을 수도 있다.

그런 위기를 이용해 대중적인 반대 운동을 건설하고 위험한 친제국주의 행보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

민주당을 믿지 마라

한편, 한일 ACSA 추진을 비판하는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한일 동맹 추진을 막을 수 있을까?

아니다. 민주당은 못 믿을 세력이다. 일본 제국주의에 대한 민주당 입장에는 근본적 모순이 있고, 실천도 일관되지 않다.

민주당은 야당일 때 우파 정부의 "친일 행보"를 자주 비판하지만, 그 비판의 내용은 제국주의 반대가 아니다. "굴욕적 협상," 즉 국익의 관점에서 정부가 일본과의 거래에서 너무 많이 양보한다고 비판하는 것이 핵심이다.

민주당은 한미동맹을 외교 · 안보 · 경제의 기본이라고 보고 확고하게 지지한다. 그런데 바로 그 미국이 제2차세계대전 이후 한일 관계를 밀착시켜 온 핵심 파워다.

또, 민주당은 미국 제국주의와 친하게 지내는 것이 한국 자본주의에 이롭다는 바로 그 이유에서, 일본 제국주의와의 협력 필요성을 부인한 적이 없다. 그것이 일본군 '위안부'나 강제동원 등 과거사 문제 해결을 가로막을지라도 말이다. 한국과 일본은 경제적 · 안보적 이해관계를 많이 공유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당시 대일 정책의 지론은 "미래지향적 관계를 위해 과거에 발목 잡혀 있을 수 없다. 우리 정부는 언제든 일본과 대화를 나누고 싶다"는 것이었다.

민주당이 말하는 한일 협력에는 결코 군사적 협력이 배제되지 않는다. 한일안보정책협의회(1998년), 한일 공동해난구조 훈련(1999년) 등 한일 간 안보 협력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시기는 다름 아닌 김대중 정부 때였다. '김대중-오부치 선언'이라 불리는 한일 정상 공동선언 이후였다.

윤석열 정부와 호전적 한미일 동맹을 반대하는 운동이 일관되게 성장하려면 반제국주의적인 운동이 돼야 한다. 그러려면 민주당에 대해 날카로운 비판을 삼가지 않는 정치가 중요하다.

김승주

삼성전자 방사선 피폭 사고 노동자에게 책임 전가

지난 5월 27일 삼성전자 반도체 기흥공장에서 노동자 2명이 방사선에 피폭되는 사고가 벌어졌다. 노동자들의 손은 각각 연간 노출 허용 기준치보다 무려 188배, 56배 많은 방사선에 피폭됐다. 안타깝게도 한 피해자는 손가락 7개나 절단할 위기에 처했다.

그런데 회사가 초기에 늑장 · 부실 대처로 일관했고 심지어 피해 노동자들에게 사고의 책임을 떠넘기려 한 정황이 폭로됐다.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에 따르면, 사측은 사고 이후 피해자들에 대한 최선의 치료 지원을 약속했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사고 다음날 몸에 이상을 느낀 피해자들은 사내 병원을 방문했지만 방사선 전문 진료 인력이 없어 검사도 제대로 받지 못했다. 기흥공장에 방사선 설비가 즐비하지만 사측은 관련 전문 의료인조차 상주시키지 않았던 것이다.

피해자들이 방사선 진료 전문 병원인 서울 원자력병원으로 이송을 요청했지만, 사측은 사내 구급차가 한 대뿐이라 관외로 이송이 불가하다며 수원아주대병원으로 데려갔다.

그러나 그곳에도 방사선 진료가 가능한 의사는 없었다. 심지어 사측은 원자력병원으로 이송을 하루 뒤로 미루자고 했다. 피해자들이 이를 거부하고 원자력병원으로 이동해 검사를 받은 결과 방사선 피폭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사측은 양손을 쓸 수 없는 피해자의 간병인 지원과 치료비 지급도 거부했다. 피해자는 카드 대출을 받아 병원비를 납부해야 했다.

몰염치한 사측의 태도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는다. 사측은 피해자들에게 사고 책임을 떠넘기려 시도했다.

피해자들은 방사선 발생 장비를 점검하던 중에 피폭 사고를 당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당시 방사선 발생을 차단해야 하는 '인터락'(안전을 위해 특정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작동을 막는 장치)이 오류로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피폭 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그런데 사측 관리자들은 사고 초기 작성한 보고서에서 피해자들이 인터락을 작동시키지 않았다며 피해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려 했다.

그러나 해당 장비의 인터락은 "A급 인터락으로 국가 법령에 따라 관리되기 때문에 작업자가 임의로 조작할 수 없"다.

노조에 따르면 허위 보고서를 쓴 관

▶ 5면으로 이어짐

정부는 수단인들을 난민으로 인정해야 한다

지난 8월 23일 서울역광장에서 수단인 난민 20여 명이 한국 정부에 망명을 허락해 달라고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연합뉴스〉 보도를 보면, 이들이 내건 배너에는 "우리는 전쟁과 폭력을 피해 달아났습니다. 우리의 안전과 망명을 허락해 주십시오" 하는 요구가 영어와 다소 어색하게 번역된 한국어로 쓰여 있었다.

집회에 참가한 압둔 모하메드 씨(31)는 지난해 4월 발발한 내전으로 수단에 돌아갈 수 없는 상황이라고 〈연합뉴스〉에 말했다. 2017년 한국에 온 모하메드 씨는 수단 정부가 마비돼 여권을 갱신할 수 없고, 한국 비자도 만료돼 미등록 체류 신세가 됐다고 한다. 3개월마다 법무부에서 출국 기한을 유예받고 있지만, 여권도 비자도 없는 불안정한 신분인 탓에 일일 아르바이트로 겨우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

모하메드 씨는 "한국에 있는 수단인의 90퍼센트가 여권이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올해 7월 말 기준 한국에 거주하는 수단인은 354명이다.

재한 수단인들은 수단 내전 발발 직후인 지난해 5월 15일에도 유엔난민기구 한국대표부 앞에서 40~50명이 참가한 집회를 열고, 유엔과 한국 정부에 난민으로 보호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한 발언자는 자신들에게 건강과 교육, 노동에 대한 권리가 부족하다고 호소했다. 난민인권네트워크가 이 집회 개최를 도왔다.

수단은 2019년 혁명으로 30년간 통치한 군사 독재자 알바시르가 물러나고 군부가 권력을 민주화 항쟁 지도부에게 일부 양보하며 과도 정부가 구성됐다. 하지만 2021년 군부가 다시 쿠데타를 일으켜 권력을 완전히 장악했다(반혁명).

사진 출처 재한 수단 난민 커뮤니티

여행금지 지역으로 가라고? 지난해 5월 유엔과 한국 정부에 난민 인정을 요구하며 집회하는 수단인들

반혁명

군사 쿠데타를 일으켰던 군부 내에서 지난해 4월에 정권의 주도권을 둘러싸고 내전이 시작됐다. 수도 하르툼을 비롯한 전국 각지에서 치열한 총격전과 탱크, 전투기까지 동원된 포격이 벌어졌다.

이로 인해 수많은 수단인이 집을 잃었고, 기반 시설이 파괴돼 식량, 물, 의료 서비스가 부족해져 큰 고통을 겪고 있다. 유엔 인도주의업무조정국(OCHA)은 지난해 4월부터 올해 8월까지 수단에서 이웃 나라로 피란한 사람이 210만 명을 넘고, 현재까지 수단 내 실향민만 약 1070만 명에 이른다고 추산했다. 극심한 식량 위기를 겪는 수단인도 약 2560만 명으로, 인구의 절반이 넘는다고 한다.

또, 유엔은 내전 발발 후 민간인 사망자가 1만 5000명 이상이라고 추산했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난민을 보호하는 데 매우 인색하다. 1994년 이래 누적 난민 인정률은 2.7퍼센트이고, 인도적 체류 허가를 포함한 '보호율'도 7.6퍼센트에 불과하다. 올해 1~7월은 이보다 더 낮아 각각 1.7퍼센트, 3.7퍼센트에 머물렀다.

한국 외교부는 지난해 4월 29일부터 수단 전 지역을 여행금지 지역으로 지정해, 이를 내년 2월 28일까지 연장한 상태다. "수단정부군(SAF)과 신속지원군(RSF) 간 무력충돌로 사상자와 피난민이 증가하는 등 수단 내 정세 및 치안 상황 불안정이 지속되고 있음을 감안, 우리국민 보호를 위해 수단에 대한 방문 · 체류를 계속해서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한국 정부 자신도 수단으로 돌아가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고 인정한 셈이다. 그러면서 수단인들을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수단인의 생명과 안전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인가?

한국 정부는 수단인들을 난민으로 인정하고, 한국에서 안정적으로 머물며 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임준형

▶ 4면에서 이어짐

계자들에 대한 징계 조처는 아직까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사측은 지금도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한 바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애사심 갖고 일해 봤자, 다치면 소모품 취급"

노동조건과 안전에 대한 삼성전자의 태도는 고 황유미 씨 등 반도체 직업병 피해자들을 외면해 왔던 것에서 달라진 게 거의 없다.

노조는 피해자인 이모 조합원이 2012년 입사 이후 상장을 20여 개나 받을 정도로 열심히 일했는데도, 회장 이재용으로부터 사과 한 마디 못 받는 등 사고 이후 사측이 자신을 소모품처럼 다룬다는 생각에 깊은 실망과 분노를 느꼈다고 전했다.

그는 이런 대우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노동자 전체의 문제임을 강조하며 노동조합이 앞장서서 이러한 부당한 처우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노조가 추가 폭로한 바에 따르면 당시 피폭 사고 현장에는 피해자들 외에도 청소, 물류, 장비업체 등 협력업체 소속의 많은 노동자들이 있었지만, 사측은 이들에게 피폭 상황을 알리지 않았다. 사고를 숨기는 데만 골몰한 것이다.

삼성전자노조는 이재용과 사측에 피해자에게 즉시 사과하고 전폭적인 지원을 할 것, 사고 책임자와 허위 보고서 관여자에 대한 엄중히 처벌할 것, 한 달 내로 방사선 장비를 다루는 전 직원과 해당 사고 라인에 근무하고 있는 모든 직원(협력업체 포함)에 대한 특수 검진 실시 등 9가지 사항을 요구하고 있다. 또 노조 요구를 반영한 재발 방지 대책을 9월 안에 공표하라고 촉구했다.

삼성전자 사측과 이재용은 즉시 노조의 요구에 응해야 한다.

신정환

ws.or.kr

더 많은 기사를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새로운 기사들이 수시로 업데이트됩니다.

★ 보안경찰, 민중민주당 압수수색 **민중민주당 탄압 중단하라**

★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수감자 고문 방침**

★ 예루살렘 팔레스타인인의 목소리 **"이스라엘은 서안지구를 보복 대상으로 삼으려 합니다"**

★ 보건의료노조 파업 **간호법 쟁취한 한편, 임금 인상은 아쉬움 남기다**

★ 2025 예산안 **부자 감세 늘리며 긴축 공세 강화하다**

지금도 쥐꼬리만 한데 ‘더 내고 덜 받아야 한다’는 국민연금 개악

강동훈

8월 29일 국정브리핑에서 윤석열은 “4대 개혁(연금 · 의료 · 교육 · 노동 개혁)을 반드시 이뤄낼 것”이라며 “연금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한다”고 밝혔다. 9월 4일에 구체적인 정부 개악안을 발표하고, 국회 논의를 추진하겠다고 한다.

이미 윤석열이 발표한 내용만 봐도 ‘더 내고 덜 받는’ 심각한 개악이다. 21대 국회 연금특위안과 지난 5월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더 내고 조금 더 받는’ 개악안도 거부하더니 한층 더 심각한 개악안을 내놓은 것이다.

윤석열이 밝힌 연금 개악의 핵심은 ‘자동안정화’ 도입과 세대별 보험료율 차등 인상이다.

우선, 자동안정화 장치는 인구 구조나 경제 여건의 변화, 국민연금 기금 수익률 등에 따라 보험료와 소득대체율, 연금 지급 시기 등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제도다. 서구 여러 나라들이 이미 연금 개악의 일환으로 시행 중인 연금 삭감 방안이다.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이하 연금행동)이 다른 나라 사례들을 분석한 보고서를 보면, “자동안정화 장치는 전반적으로 공적연금의 수준을 하락”시킨다. 국민연금연구원의 ‘국민연금 자동조정 장치 도입 필요성 및 적용 방안’ 보고서를 봐도, 자동안정화 장치를 도입할 경우 2030년부터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수급자의 생애 총급여가 기존보다 17퍼센트가량 감소하는 것으로 추계됐다.

사진 출처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윤석열이 제안한 국민연금 ‘자동안정화’는 연금을 삭감하려는 신자유주의적 개악이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연금통계 결과’를 보면, 우리 나라의 65세 이상 노인 중 국민연금을 받는 사람은 절반이 채 안 됐고, 평균 수령액은 41만 3000원에 그쳤다. 여기에 기초연금(평균 27만 9000원)을 더해도, 연금 수령액은 월평균 65만 원 정도다. 1인 최저생계비인 116만 원의 절반밖에 안 되는 ‘용돈 연금’ 수준인 것이다.

그나마 상당수 노인은 평균도 안 되는 연금을 받고 있고, 노인의 10퍼센트가량은 공적연금을 한 푼도 못 받는다. 이 때문에 노인빈곤율은 38.1퍼센트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았다. 연금만으로는 생활할 수 없으니 노인의 약 30퍼센트는 65세 이후에도 일을 해야 한다.

이런데도 윤석열은 연금 재정을 안정화시켜야 한다며 ‘용돈 연금’마저 깎으려 하는 것이다. 이는 기본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실시하는 국민연금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개악이다.

한편, 윤석열은 ‘세대 간 공정성’을 높여야 한다며 보험료율 차등 인상도 추진하고 있다. 40~50대는 매년 1퍼센트포인트씩 4년에 걸쳐 보험료율을 올리고, 20~30대는 그 절반인 0.5퍼센트포인트씩 8년에 걸쳐 보험료율을 인상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마치 청년 세대를 위하는 척하지만, 이는 세대 간 갈등을 부추기는 사악한 방안이다. 윤석열이 내놓은 방식대로 하더라도 20~30대가 더 오랫동안 높은 보험료율을 감당해야 한다. 청년 세대가 더 큰 피해를 보는 것이다.

중장년층이라고 해서 상황이 좋은 것도 아니다. 정년이 60세라고 하나 50도 되기 전에 퇴직하는 노동자들이 허다하다. 이렇게 퇴직한 노동자들은 다시 열악한 비정규직 일자리를 찾아 생계를 겨우 유지하는 경우가 많다. 2022년 기준 비정규직 노동자 약 820만 명 중 59퍼센트가 50~60대이다. 이들의 보험료를 더 빨리 올리는 것은 노동계급의 생계난을 더욱 가중시킨다.

결국 세대별 보험료율 차등 인상은 방법만 달리해서 청년 노동자와 중장년 노동자의 보험료 부담을 대폭 올리겠다는 것밖에 안 된다.

대통령실은 이번 개악으로 국민연금 고갈 시점을 30년(2055년→2085년) 늦출 수 있다고 주장한다. 국민연금 기금 보호를 금과옥조처럼 여기며, 노후생활 보장은 내팽개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연금 기금이 바닥난다고 해서 연금 지급이 중단돼야 하는 것은 아니다. 서구 여러 나라들은 이미 기금이 없어도 노령연금을 지급하고 있고, 한국의 건강보험도 기금 없이 운영 중이다.

윤석열 정부와 우파들은 2055년 즈음이 되면 국민연금 기금이 소진된다며 호들갑을 떨지만, 그해 한국의 전체 연금 지출은 GDP 대비 7퍼센트가량에 불과할 것으로 추계된다. 이미 유럽 국가들은 연금 지출액으로 GDP의 10퍼센트 이상 쓰고 있는데도 말이다.

연금 기금 안정을 위해서가 아니라 진정으로 노후 생활 보장을 위해 연금을 개혁해야 한다. 그러려면 부유층과 기업주들에게서 더 많은 세금과 보험료를 거둬 연금만으로도 노후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연금을 지급해야 한다.

차악을 최선으로 포장하는 민주당과 진보 단체들

한편, 윤석열이 연금 개악 방안을 발표하자, 민주당은 “차별과 삭감, 세대 갈등을 유발하는 연금개혁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며 정부 안을 반대하는 입장을 발표했다.

그러나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5월 윤석열에게 제안한 연금 개혁 방안도 개악안이었다.

노동자들의 보험료 부담은 44퍼센트나 높이고(소득의 9퍼센트에서 13퍼센트로), 연금 지급액은 10퍼센트만 올리는 안이었기 때문이다.(소득대체율을 40퍼센트에서 44퍼센트로)

예를 들어, 생애 월급 평균이 300만 원(현재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 소득)인 사람은 보험료가 (사용자가 절반 부담을 한다고 해도) 13만 5000원에서 19만 5000원으로 월 6만 원이나 늘어나지만, (예상 평균 납입 기간인 27년 납입을 전제로 했을 때) 국민연금은 80만 원에서 88만 원 정도로 늘어나는 데 그치는 방안이다. 지금 월 6만 원을 더 내고 30년 뒤에 8만 원을 더 받는 게 무슨 개혁이란 말인가. 게다가 개인이 보험료를 전부 부담하는 지역 가입자는 월 보험료가 12만 원이나 오르는 것이니 더 내는 것만큼 더 받지도 못한다.

민주당은 연금 지급액은 찔끔 늘리면서 보험료를 대폭 인상하는 것을 개혁이라고 포장하고 있는 것이다. 민주당은 이미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 보험료는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을 대폭 낮추는 연금 개악을 주도한 바 있다.

재정 안정

더 큰 문제는 연금행동(민주노총 · 한국노총 · 참여연대 등 포함)이나 진보당 · 정의당 같은 주요 진보 단체들도 ‘노후 보장성’을 내세우며 보험료 인상에 찬성한다는 점이다.

물론 이 단체들은 윤석열의 개악안이 ‘세대 간 갈라치기’이고, ‘노후생활 파탄’ 방안이라며 비판했다. 연금행동과 진보당은 이재명 대표의 양보 제안을 비판하고, 국민연금 지급액을 좀더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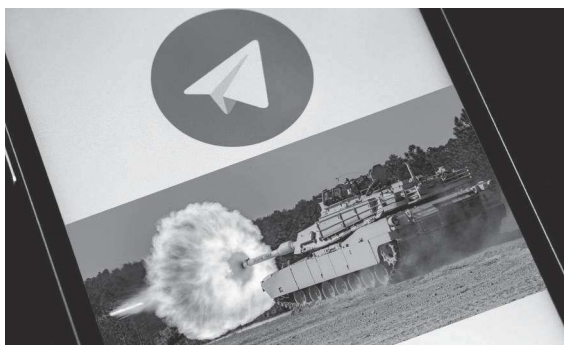
그러나 이들도 국민연금 ‘재정 안정’을 위해 노동자들도 보험료 인상으로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왜냐하면 이들 개혁주의자들은 국가 경제를 위해 재정이나 연금 기금의 건전성을 중시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연금 기금 안정성을 중시하며 노동자 고통 분담을 받아들이면 우

▶ 7면으로 이어짐

텔레그램 창업자 파벨 두로프 체포

인터넷 메신저를 둘러싼 제국주의적 경쟁과 관계있다



텔레그램 창업자 파벨 두로프가 8월 24일 프랑스에서 체포됐다. 프랑스 검찰은 조직 범죄 집단이 불법 거래를 할 수 있도록 공모한 혐의, 감청 협조 거부, 아동 포르노 배포 공모 등의 혐의로 두로프를 수사하고 있다.

텔레그램은 러시아 출신인 파벨 두로프와 그의 형이 2013년에 만든 소셜 메신저다. 현재 전 세계에서 약 10억 명이 사용한다. 텔레그램은 홍콩 항쟁과 러시아 반정부 운동을 비롯해 여러 운동의 참가자들이 국가 검열을 우회하려고 사용하곤 한다.

이번 두로프 체포에는 유럽 지배자들의 핵심 이익이 걸린 우크라이나 전쟁이 강력한 정치적 동기로 작동했을 것이다.

텔레그램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모두에서 유력한 메신저가 됐다. 러시아인 50퍼센트, 우크라이나인 72퍼센트가 텔레그램을 사용한다.

양측 정부도 텔레그램을 적극 활용했다. 전쟁에서의 선전 · 선동, 공습경보, 구조, 비공식 군사 정보 수집에 텔레그램이 이용된다.

통신과 안보

러시아는 심지어 군용 통신에도 텔레그램을 사용했다. 이는 텔레그램이 러시아와 깊이 협력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불러일으켰다.

우크라이나 보안국은 올해 초 텔레그램 서버가 러시아에 있으며, 텔레그램이 러시아 보안국과 협력해 친우크라이나 채널들을 차단한다고 비난했다. 우크라이나 의원들 일부는 텔레그램이 러시아로 데이터를 유출할 수 있다며 지난 3월 텔레그램 규제 법안을 발의했다.

법안 발의 한 달 뒤 텔레그램은 우크라이나가 군사 정보 수집을 위해 운영하던 자동 프로그램(봇) 3개를 하루 동안 차단해 의혹을 증폭시켰다. 텔레그램은 알고리듬 오작동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텔레그램이 일방으로 러시아 편이라고 보기는 힘든 정황도 있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 같은 SNS와 반정부 언론들이 차단돼 있는 러시아 상황에서 텔레그램은 정부 주장과 다른 목소리를 접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대중적 플랫폼이다.

텔레그램은 〈메두자〉처럼 우크라이나 전쟁 반대를 표방하는 언론이 채널을 개설해 검열을 우회하도록 해 준다.

지난해 6월 프리고진의 쿠데타 당시에도 텔레그램은 프리고진과 바그너 용병 그룹의 채널을 차단하지 않았다.

제국주의적 갈등이 심화되면서, 메신저를 통제하고 감시하려는 강대국 간 경쟁도 치열해졌다

텔레그램이 정말 러시아 측에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는지는 확인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서방은 텔레그램이 러시아 정부에 협조한다고 의심한다. 그래서 이참에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 할 것이다.

두로프의 체포는 프랑스 등 서방이 텔레그램에 보내는 경고인 동시에 다른 인터넷 기업들에게도 조심하라고 하는 메시지다.

러시아는 즉각 반발했다. 이번에는 러시아가 텔레그램을 통한 데이터 유출을 걱정하게 된 것이다.

무릇 제국주의 강대국들은 안보를 위해 인터넷 등 통신을 통제하려 한다.

예컨대, 미국은 중국 정부의 해킹으로 의심되는 F-35 전투기 정보 유출 사건 등을 겪으면서 2010년 "사이버 전쟁"을 지휘할 사이버 사령부를 창설했다. 당시 대통령 오바마는 디지털 인프라를 국가의 전략 자산으로 규정했다.

비슷한 때 미국 국가안보국(NSA)은 사이버 감시를 강화해 전 세계 통신을 무차별 도청했다. 동맹국인 독일 메르켈 총리조차 감시 대상이었다.

제국주의

이런 일들은 강력한 국가 간의 제국주의적 갈등이 인터넷에 영향을 미치는 양상을 보여 준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될 즈음 러시아군은 왓츠앱과 텔레그램 중 텔레그램을 선택했다. 미국 정보기관이 왓츠앱 내용을 들여다볼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다. 왓츠앱을 소유한 페이스북 모회사 메타는 미국 기업이다.

거꾸로 우크라이나군은 군내 텔레그램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역시 러시아와 텔레그램이 연결돼 있다고 의심하는 것이다.

프랑스는 지난해 말 보안을 이유로 장관들에게 국산 메신저를 쓰라고 지시했다.

프랑스 대통령 마크롱은 2018년에 두로프를 만났을 때 텔레그램 본사를 프랑스로 옮기라고 권했다가 거절당하기도 했다. 마크롱은 주요 인터넷 메신저를 자국 통제하에 두려 했던 것이다.

미국 NSA가 전 세계를 도청할 수 있었던 데는 주요 인터넷 기업들이 모두 미국에 있다는 점이 중요했다. 마이크로소프트, 야후, 구글, 페이스북, 유튜브, 애플 등은 모두 NSA가 자신들의 인프라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 줬다.

제국주의의 지정학적 긴장이 심화되면서 인터넷 통제를 둘러싼 긴장 역시 높아지고 있다. 주요국 각국의 지배자들은 안보 관점에서 통신을 자국 통제하에 두려 한다. 일본이 라인 메신저를 자국 기업으로 만들려 하는 것도 자국민 대다수가 사용하는 통신 수단을 외국 통제하에 두는 것을 극도로 꺼리기 때문이다.

인터넷을 통제한다는 것은 그 내용을 감시하겠다는 뜻이기도 하다. 프랑스 역시 두로프를 기소하면서 감청 협조 거부를 문제 삼았다. 감시가 증가하면 표현의 자유는 침해된다. 10여 년 전 에드워드 스노든의 NSA 폭로로 주춤했던 국가 감시가 다시 생명력을 얻고 있는 것이다.

프랑스 정부의 두로프 체포는 제국주의간 갈등이 인터넷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 주는 최신 사례다.

안형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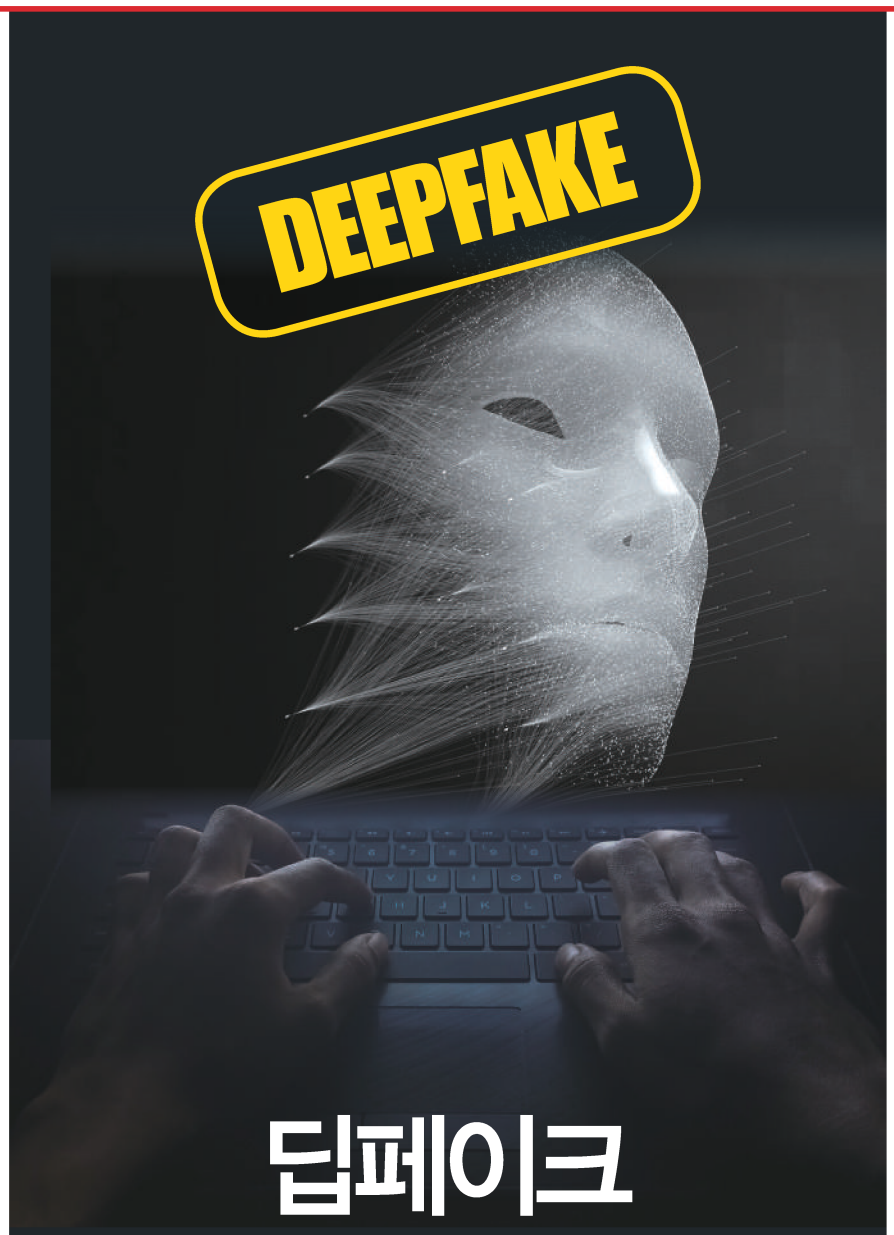
▶ 6면에서 이어짐

파들이 손쉽게 세대 간 갈라치기를 할 수 있게 된다. 부유층 · 기업주의 부담 증가 논의는 쏙 빼놓고, 노동계급 중에서 청년이 더 부담해야 하는지, 중장년이 더 부담해야 하는지로 논점을 돌리기 쉽기 때문이다. 즉, 재원을 어느 계급으로부터 거둘 것인지 하는 진정한 문제가 흐려지게 되는 것이다.

노동자들에게 고통 분담을 요구하는 것은 노동자들이 연금 개혁을 위해 투쟁에 나설 싹을 죽이는 일이기도 하다. 이미 생계난에 시달리는 노동자가 상당수인데, 자기의 보험료 부담을 대폭 올리라고 투쟁에 나설 노동자는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또, 진보 단체들은 의회 협상(민주당이 수용할 만한 수준)을 통해서만 연금 개혁이 가능하다고 본다. 그러나 의회 협상을 중시하고 아래로부터의 투쟁을 부차적인 것으로 방치하면, 개혁 동력을 일궈 낼 수 없다. 경제가 지지부진해 자본가들이 좀체 양보하지 않으려 하기 때문이다. 또, 민주당이 정부 · 여당과의 타협에 나서 더한층의 개악안을 수용하는 것을 막을 힘도 없게 된다.

최근 연금행동은 윤석열의 개악안을 비판하며 "우리에게 남은 것은 결국 연대와 투쟁밖에 없다"고 선언했다. 노동자 고통 분담론을 정면 비판하고, 기업주 등 부유층의 세금과 보험료 부담을 높이라고 요구하며 싸우지 않는다면 이 말은 공문구에 그치게 될 것이다.



딥페이크 보수·우파의 말을 다 믿지 말라

성지현

딥페이크 성범죄가 수면 위로 드러나며 일파만파 논란이 일고 있다.

딥페이크(deepfake)는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원본 이미지에 다른 이미지를 결합해 원본과 쉽게 구분할 수 없는 가공의 이미지를 만드는 기술을 뜻한다.

이 기술은 2010년대 중반부터 "지인 능욕"이란 이름으로 특정 여성의 얼굴 사진에 나체나 성행위 하는 사진 등을 합성해 유포하는 성범죄에 이용돼 왔다. 최근엔 기술의 발전으로 '봇'(자동화 프로그램)을 이용해 누구나 단 몇 초 만에 불법 합성물을 손쉽게 만들 수 있게 되면서 그 규모와 피해가 급증했다.

특히 중·고·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학교별 불법 합성방(전국 학교 수백 곳), 특정인을 아는 사람들이 모인 불법 합성방("겹지인방") 등이 알려지며 충격을 줬다. '나도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커지고 SNS에 올린 사진을 삭제하라는 행동 요령도 널리 공유됐다.

딥페이크 성범죄는 직접적인 접촉이 있거나 실제 나체나 성행위를 촬영하는 것은 아니고, 악질성의 정도도 다양할 수 있다. 그럼에도 "소셜미디어에 사진을 올리는 현대인의 일상적 행위가 범죄의 대상이 돼 허위로 조작돼 돌아다니는 것을 알게 된 평범한 피해자가 느낄 성적 굴욕감과 정신적 고통을 [이루 다] 헤아릴 수 없다."(서울대 딥페이크 성범죄 1심 판결)

"불안이 과장"돼 있다는 점을 과장하는 개혁신당 국회의원 이준석 류의 주장은 피해자의 고통에 대한 감수성이 전혀 없는 것이다.

논란이 커지자 비로소 윤석열은 "딥페이크는 명백한 범죄 행위"라고 했고, 국무총리 한덕수도 "마약과 같은 수준의 확고한 대응"을 주문했다. 국민의힘, 민주당 모두 "응분의 죗값," "강력한 처벌"을 강조했다. 경찰은 집중 단속에 나섰다.

그러나 이런 말들이 무색하게도 디지털 성범죄는 그동안 정부와 국회(민주당이 다수)의 방치 속에 곪아 왔다.

대선 기간에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던 윤석열은 취임하자마자 법무부 디지털 성범죄 전문 TF(친민주당계로 찍힌 팀장 서지현 검사)를 해산시켰다. N번방 사건을 계기로 만들어진 이 TF는 해산될 때까지 9개월간 총 11차례 권고안을 발표했지만 정부·국회에 의해 실현된 게 거의 없다.

지난해 윤석열 정부는 재정 긴축 기조를 강조하며 젠더폭력 방지와 피해자 지원을 위한 예산을 대폭 삭감했다. 디지털 성범죄 예방 목적의 교육 콘텐츠 제작 예산은 전액 삭감됐고, 성교육 예산도 축소됐다.

윤석열 정부는 국정과제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추가 설치를 약속했지만 지키지 않았다. 지원센터는 만성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다. 지난해 지원센터의 도움을 받은 피해자는 약 9000명으로 5년 새 약 7배로 늘었지만, 4년째 39명이 이 모든 일을 담당하고 있다. 그런데도 지원센터의 내년 운영 예산은 오히려 2억 원이 깎였다(32억 6900만 원).

재정 긴축 기조하에서도 내년에 2조 2000억 원이 늘어난 국방비와 비교해 보면(61.6조 원), 윤석열 정부의 우선순위가 어디 있는지 드러난다.

경찰도 피해자들을 거듭 좌절시켰다. 경찰은 '텔레그램의 비협조'를 이유로 서울대 딥페이크 성범죄 사건의 수사를 중단했었다. 결국 피해자들이 수개월간 직접 증거를 모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이의 신청하고(기각 결정), 서울고등검찰청에 항고하고(기각 결정), 서울고등법원에 재정 신청을 해 재수사를 강제했다. 그나마 해외 유명 언론에서 한국이 딥페이크 성범죄자의 천국으로 보도된 덕에 세상에 널리 알려졌다.

이를 보면, 텔레그램 측의 비협조 문제도 있기는 하지만, 수사와 처벌이 전혀 불가능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피해자들이 정부와 경찰의 미온적 태도에 분통을 터트린 까닭이다.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가해의 정도에 따른 처벌은 꼭 필요하다. 피해자에 대한 국가의 지원도 대폭 강화돼야 하고, 예방 대책을 위한 정부 지원도 늘어나야 한다.

'딥페이크 = 가짜 뉴스?' 표현의 자유 제약하려는 정부·여당

윤석열 정부는 딥페이크 처벌 강화 여론을 무엇보다 반정부적인 '가짜뉴스' 공격에 이용하려고 한다. '가짜뉴스'는 윤석열 정부가 체제와 정부에 대한 반대·비판 의견을 입막음 하려는 코드명으로 쓰여 왔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딥페이크 성범죄물 단속을 주문하며 "페이크 뉴스라든지 성범죄 등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김정수 방심위원도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딥페이크를 활용한 … 허위조작정보는 일반적인 가짜뉴스보다 훨씬 악의적"이라며 규제 필요성을 역설했다.

'딥페이크=허위조작정보=악의적 가짜뉴스'가 된 것이다.

이번 딥페이크 성범죄 논란을 계기로 발의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들 중에는 딥페이크 성범죄보다 훨씬 더 포괄적인 개념인 "허위조작정보 유통"을 규제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들이 있다. 이는 지난해에 국민의힘이 '가짜뉴스 방지법'으로 규정하고 당론 발의한 법안과 대동소이하다.

그런데 "허위조작정보" 개념은 정의가 너무 모호해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거나 규제 대상이 확대될 우려가 크다고 평가받았다.

올해 4월 대통령실과 경찰은 대통령 풍자 영상이 딥페이크로 만들어진 명예훼손 영상이라며(실제는 딥페이크 영상이 아니었다) 영상을 게시·공유한 9명을 수사한 일이 있는데, 시사적이다.

해외에서도 딥페이크 규제는 논란이 많다. 예컨대 친공화당적인 텍사스주의 딥페이크 방지법은 선거 때 정치인에 대한 풍자나 패러디 같은 표현도 모두 규제한다.

영국의 '온라인 안전법'(여기에는 비동의 딥페이크 이미지 제작만으로 처벌하는 규정이 있고, 진보당과 여러 언론이 우호적으로 언급했다) 역시 광범한 사람들의 표현을 위축시킨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예컨대 이 법은 영국해협을 건너는 난민들의 영상을 유해 콘텐츠(불법)으로 규정했다. '범죄조직에 의해 불법 이주가 부추겨지는 걸 막는다'는 명분이었다.

▶ 9면으로 이어짐

▶ 8면에서 이어짐

정의로운 처벌 필요하지만 엄벌주의의 역효과도 고려해야

지난 일주일 동안에만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법안이 30개 가까이 발의됐다. 처벌 강화, 경찰의 위장 수사 확대, 촉법소년 연령 하향, 허위조작정보 유통 규제 등 관련 제안이 하루가 멀다 하고 나오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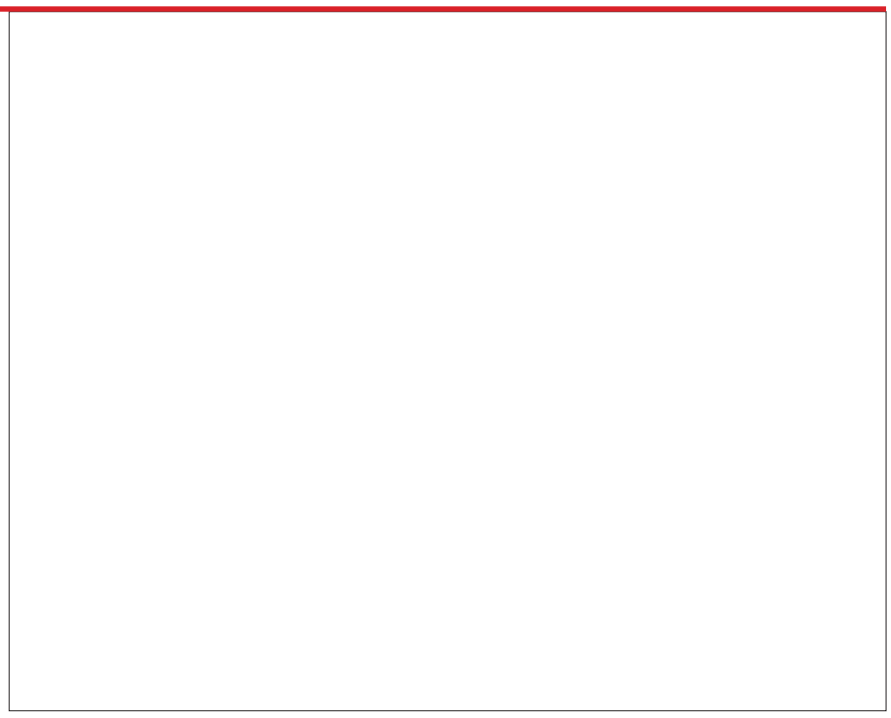
진보당과 정의당도 "철저한 수사"와 "강력한 처벌"을 요구했고, 학교 내 딥페이크 성범죄 실태조사를 진행한 전교조도 "처벌 형량 강화"와 "시청 · 소지죄 신설"을 요구했다.

피해자의 피해와 고통을 위해 철저히 수사하고 가해자를 처벌하는 것은 필요하다.

하지만 정부가 엄벌을 내세우는 것의 의도와 효과도 고려해야 한다.

가령, 현재 주요 대안으로 논의되는 '시청 · 소지죄'는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다. 소지 · 시청의 경로가 다양할 수 있는 데다가(범죄인 줄 모르고 봤다든가, 합의한 합성물이라거나 등), 경찰에게 사람들의 컴퓨터와 핸드폰을 일일이 들여다 볼 수 있는 감시 권한을 쥐어주는 것과 다름없다. 정말 그렇게 한다면 개인의 자유를 극도로 위축시킬 것이다. 그나마 별 효과도 없을 것이다.

소지 · 시청죄는 N번방 사건 이후 불법촬영물에 대해서 이미 신설됐었다. 당시 많은 페미니스트는 '수요 억제' 논리로 이를 지지했다. 보는 놈이 없으면 만들고 유통하는 놈도 줄 거라는 논리다. 하지만 여성 차별적이고 성의 소외가 만연한 체제가 성범죄 양산의 토양이므로 보는 놈을 아무리 처벌해도 문제가 해결되는 건 불가능하다. 문제가 완화되는 것조차 쉽지 않다.



딥페이크 성범죄 이면에는 여성 차별적이고 성의 소외가 만연한 자본주의 체제가 있다

촉법소년 연령 하향은 윤석열의 대선 때부터 공약이었는데, 이번에 다시 등장했다. 촉법소년 연령 하향은 사법제도의 불평등을 강화하고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이 반성하고 교화될 기회를 앗아가며 낙인과 배척을 강화한다.

(관련 기사: 본지 412호, 촉법소년 연령 기준 하향 반대해야 한다)

많은 정부가 범죄에 대한 도덕적 공포를 조장하고 엄벌주의를 내세워 왔다. 경찰력을 증강하고 노동자 등 서민에 대한 통제력을 강화하는 데에 이용하기 쉽기 때문이다.

디지털 성범죄, 왜 근절되지 않나

2010년대 이래 디지털 성범죄는 점점 증가하고 산업화돼 왔다. 딥페이크 · 불법촬영 성범죄물의 온상이던 소라넷(현재 폐쇄)과 그 아류 사이트들은 광고 수익만 해도 수억 원 이상이었다.

소라넷 폐지 운동, 2018년 불법촬영 항의 시위, N번방 사건을 세상에 알린 불꽃추적단의 활동 등으로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이 세상에 드러났고, 정부도 그때마다 대책 마련에 나섰다(2017년 디지털성범죄 피해방지 정부종합대책, 2019년 웹하드카르텔 방지대책, 2020년 N번방 방지법 등).

그럼에도 디지털 성범죄는 근절되지 않고 있다.

딥페이크 기술의 대중화나 익명성 · 보안성이 뛰어난 메신저 등장 등이 디지털 성범죄라는 특정한 범죄 유형에 반영돼 있지만, 그것이 범죄의 원인은 아니다.

현재 나오는 대안의 하나로 텔레그램 국내 접속 차단 조처가 제안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박지현 전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과 서지현 검사가 주장한다.

명백한 성범죄 수사에도 텔레그램 측이 협조하지 않는 것은 문제이지만(이것은 텔레그램 측의 이윤 보호와도 연관될 것이다), 텔레그램을 차단한다 해도 딥페이크 성범죄를 위한 다른 플랫폼이 얼마든지 생겨날 것이다. 이 요구는 되레 국가의 플랫폼 검열을 강화하는 역효과를 낳을 가능성이 크다.

주요 여성 단체들은 "남성문화"를 원인으로 짚는다.

성범죄 가해자 대부분이 남성이고 일부 남성 사이에서 성차별적 관행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이것이 곧 대부분의 남성이 성범죄의 잠재적 가해자임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남성 일반을 잠재적 가해자로 취급하는 종류의 페미니즘은 성범죄의 근원을 엉뚱한 데서 찾아 진정한 원인을 흐려서 해결책을 찾기 더 어렵게 만든다. 많은 남성(대부분 성범죄에 분노한다)에게 괜한 반감(혹은 죄책감)을 낳기도 한다.

디지털 성범죄의 근본 원인을 먼저 짚어야 한다. 자본주의 사회의 구조적인 여성 차별, 성의 소외, 성조차 돈벌이 수단으로 만드는 이윤 체제 문제가 있다. 일각이 말하는 "남성문화"는 문제의 원인이 아니라 그 증상이다.

자본주의 체제하에서 여성은 열등한 존재로 취급되고(이는 노동력 재생산 부담을 개별 가족과 그 안의 여성에 전가시키는 것과 관련 있다), 사람(특히 여성)의 몸과 성행위 자체가 인격과 분리돼 사고 팔린다. 여성의 '섹시한' 이미지는 상품 판매와 이윤 추구에 널리 이용된다.

이런 조건 속에서는 뒤틀린 성의식을 갖고 범죄를 저지르는 망가진 개인들이 끊임없이 양산된다. 자본주의가 경쟁과 파편화 경향을 더욱 강화하면서 사람들 사이에서 상호 존중하며 교감 · 협력하는 관계를 경험하지 못한 개인들이 늘면 이런 문제가 더 악화될 수 있다.

게다가 지난 10여 년의 과정에서 보듯, 경제 침체 시기에 국가는 여성의 피해 구제나 성범죄 예방에 예산을 충분히 필요한 만큼 쓰려고 하지 않는다.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수사와 처벌 요구, 법제도 개선 등은 필요하다.

더 나아가 자본주의 체제에 도전하는 운동이 심화돼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남녀 노동계급의 연대와 단결을 추구하는 정치가 필요하고 중요하다.

공개 토론회

관심 있는 주제, 가까운 지역을 찾아 보세요

더 많은 공개 토론회 상세 정보

서울 서부

윤석열의 극우화와 뉴라이트 역사관, 무엇이 문제인가? - 마르크스주의의 관점

일시 9월 11일(수) 오후 7시 30분 장소 서울 한겨레 교육 703호 (신촌역 6번 출구 도보 5분)

발제 김문성 〈노동자 연대〉 기자, 《최근 한국 현대사》 공저자

참가비 4000원 (학생, 난민 3000원) 외국인 참가자를 위해 전문 통역사의 영어 동시통역 제공

주최 노동자연대 서울 서부 지역 모임들 문의 010-8074-2793 / s-west@ws.or.kr

서울 동부

윤석열의 극우화와 뉴라이트 역사관, 무엇이 문제인가? - 마르크스주의의 관점

일시 9월 12일(목) 오후 7시 30분 장소 서울 흥사단 3층 강당 (혜화역 1,2번 출구 사이)

발제 김문성 〈노동자 연대〉 기자, 《최근 한국 현대사》 공저자

참가비 5000원 (학생, 난민 3000원) 외국인 참가자를 위해 전문 통역사의 영어 동시통역 제공

주최 노동자연대 서울 동부 지역 모임들 문의 010-8862-8377 / s-east@ws.or.kr

울산/부산

윤석열의 극우화와 뉴라이트 역사관, 무엇이 문제인가? - 마르크스주의의 관점

일시 9월 21일(토) 오후 3시 장소 울산 비플라운지 (중구 성남동 94-12, 3층)

발제 김문성 〈노동자 연대〉 기자, 《최근 한국 현대사》 공저자

참가비 5000원 (학생, 난민 3000원) 외국인 참가자를 위해 전문 통역사의 영어 동시통역 제공

주최 노동자연대 울산/부산 지역 모임들 문의 010-3328-9853 / busan-ulsan@ws.or.kr

독일 상황이 보내는 경고: 파시스트들이 주 선거에서 1위를 하다

찰리 킴버

본지는 수개월 전 독일에서 파시스트의 전진 가능성을 경고해 왔다. 본 기사는 9월 1일 주(州) 선거 결과로 이런 우려가 현실이 됐음을 보여 주고, 그에 맞서 대응을 준비하는 현지 혁명적 사회주의자들의 목소리를 담고 있다.

사진 출처 AfD Thüringen

'독일을위한대안'(AfD)의 핵심부는 나치들이다. AfD의 튀링겐 대표 비외른 회케

파시스트들이 독일 주 선거에서 나치 시대 이래 처음으로 제1당이 됐다. 파시즘 부상의 심각성을 더할 나위 없이 분명하게 보여 준다. 또한 독일뿐 아니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스페인 등지에서도 긴급한 대응이 필요함을 보여 준다.

정당 '독일을 위한 대안'(AfD)은 동독 튀링겐 주에서 32.8퍼센트를 득표했고 작센 주에서도 비슷하게 [30.6퍼센트] 득표했다.

AfD은 튀링겐에서 최다 득표 정당이 됐고, 작센에서는 주류 보수 정당인 기민당(CDU)과 막상막하였다.

튀링겐은 인구가 200만 명이 넘고 에르푸르트, 예나, 바이마르 등의 도시가 속해 있다. 작센은 인구가 400만 명이 넘고 드레스덴과 라이프치히를 중심으로 한다.

또 다른 동독 주인 브란덴부르크는 9월 22일에 선거를 치를 예정이다. 여론 조사에서 AfD는 24퍼센트의 지지를 받아 선두를 달리고 있다.

AfD는 이주민에 극렬하게 반대할 뿐 아니라 파시스트의 유산에 기초한 정당이다.

AfD의 튀링겐 대표인 비외른 회케는 집회에서 "모든 것을 독일에 바쳐라!" 하고 외친 것 때문에 올해 기소됐다. 그 구호는 나치가 집권하는 데서 핵심 구실을 한 나치 돌격대와 결부되는 구호다. 역사 교사 출신인 회케는 그 구호의 역사적 기원을 몰랐다고 잡아떼고 있다.

2023년 12월 또 다른 집회에서는 회케가 "모든 것은…"이라고 말하고 청중이 "독일에!"라고 답했다.

2017년에 회케는 베를린에 있는 홀로코스트 추모 공원을 "치욕을 기념하는 공원"이라고 불렀다.

정치인들은 이번 선거 운동을 인종차별로 그득하게 만들었다. 8월 23일 칼부림 사건으로 그런 추세는 더욱 심해졌다. 시리아 출신 난민 신청자가 졸링겐 시에서 3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사건이다.

끔찍한 살인 사건이 벌어지자, 이를 이용해 AfD는 난민과 무슬림을 희생양 삼는 비열한 캠페인을 한껏 고조시켰다.

AfD는 그간 전국 여론 조사에서 지지가 꾸준히 늘었고, 6월 유럽의회 선거에서는 동독 지역 최대 정당으로 부상했다.

AfD 지도자 알리스 바이델은 "독일인을 상대로 한 이주민의 폭력"이 "끔찍한 새 정상 상태가 됐다"고 주장한다. 그녀는 "이주민 유입과 체류 허가, 귀화를 최소 5년간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한다.

또한 바이델은 이렇게 말했다. "시민의 안전을 회복시킬 의지가 있는 정치 세력은 AfD뿐이다."

인종차별적 증오

그러나 다른 주요 정당들 역시 인종차별적 증오를 쏟아내고 있다. 보수 기민당의 대표 프리드리히 메르츠(그는 제1야당인 기민 · 기사당을 이끌고 있다)는 시리아나 아프가니스탄에서 온 난민을 그만 받으라고 촉구했다.

사민당 소속의 총리 올라프 숄츠는 일부 미등록 이주민들이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리고 8월 30일 금요일에는 정부가 난민을 아프가니스탄으로 추방하기 위해 준비한 비행기가 라이프치히/할레 공항을 떠났다. 2021년 8월 탈레반이 카불에서 권력을 잡은 이후 아프가니스탄 난민을 추방한 첫 사례다. 그럼에도 사민당은 득표 감소를 피하지 못했다.

선거 결과는 인종차별의 부상뿐 아니라 사민당-녹색당-자유당 연정의 실패도 보여 준다. 이 연립정부는 2021년 기민당으로부터 정권을 교체했다. 그러나 노동계급을 향한 공격을 이끌고 대대적 군국주의를 추진하며 나토의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지했다.

이번 선거 결과로, AfD가 반드시 튀링겐과 작센에서 주정부를 차지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다른 정당들은 AfD와 주정부 연정을 구성하지 않겠다고 공개 선언했다. 그러나 지역에서 직위와 권력을 놓고 벌어지는 이전투구 속에서 그런 약속이 얼마나 유지될까?

이번 선거에서 승자로 떠오른 또 다른 세력은 '자라 바겐크네히트 동맹'(BSW)이다. BSW는 "경제적으로는 좌파, 사회적으로는 우파"를 표방하는 조류 중 특별히 유해한 버전이다.(영국에서는 조지 갤러웨이가 그런 흐름을 느슨하게 대표한다.)

자라 바겐크네히트는 지난해 좌파당(디링케)에서 분열해 나왔다. 그녀는 좌파당이 전통적인 유권자층을 저버리고 "기괴한 소수자"들의 정체성 정치를 지지하는 데 열중했다고 주장했다.

이는 성소수자와 트랜스젠더 권리를 방어해 활동하는 모든 사람들을 공공연히 공격하는 것이었다. 또한 인종차별, 여성차별 등의 차별에 맞서 싸우는 것의 중요성을 완전히 부정하는 것이었다.

자라 바겐크네히트

BSW는 이번이 첫 선거 도전이었고 튀링겐에서 15.8퍼센트, 작센에서 11.8퍼센트 득표했다. 두 곳 모두에서 BSW는 좌파당을 한참 앞섰다.

바겐크네히트는 이주민을 향한 인종차별을 부추겨서 이득을 얻는다. 지난주에 그녀는 이렇게 말했다. "통제되지 않는 이주를 허용하는 자들은 통제할 수 없는 폭력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러나 바겐크네히트는 독일이 나토의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지하는 것을 호되게 비판하는 거의 몇 안 되는 세력 중 하나다. 그리고 그녀는 냉혹한 기업들과 무신경한 정치인들에 맞서는 노동자와 실업자의 친구를 자처한다.

그녀는 옛 동독 지역에서 서독에게서 버림받았다는 정서를 부채질한다. 동독 지역과 서독 지역 간 임금 격차는 서서히 줄고 있다. 그러나 동독 지역의 농촌은 완전히 붕괴된 상황이다. 사람들은 절망 속에서 더 나은 미래를 찾아 그 지역을 떠나고 있다. 2030년이 되면 동독 지역의 노동 가능 인구가 80만 명 줄어들 것이라고 정부는 추산한다.

독일의 혁명적 사회주의자 크리스티네 부흐홀츠는 이렇게 말했다.

"다행이었던 것은, 졸링겐에서 칼부림 사건 이틀 후, AfD 청년 조직의 시위에는 고작 30명이 온 반면 연대체 '졸링겐은 저항한다'의 맞불 시위에는 1500명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무슬림 인종차별은 근래 수년 동안 크게 성장했고, 일상적인 적대감, 제도화된 차별과 공격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2000년대 초 이래로 벌어졌던 것들과 같은 암살과 공격들은 중동,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시리아, 팔레스타인에서 벌어지는 전쟁과 관련돼 있습니다.

▶ 11면으로 이어짐

신민중전선이 1위를 했는데도

기업주 정부 유지하려고 작당하는 프랑스 대통령 마크롱

프랑스의 신자유주의 대통령 에마뉘엘 마크롱이 또다시 큰 위기를 일으켰다. 민주주의를 깡그리 무시하고, 신민중전선(NPF)이 세운 후보 루시 카스테트를 정부를 이끌 총리로 임명하기를 거부한 것이다.

신민중전선은 지난 7월 총선에서 가장 많은 의석을 차지했다. 그러나 마크롱은 공공연하게 친기업적인 정부를 구성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사람들이 그런 정부를 선출하지도 않았는데 말이다.

프랑스 헌법에는 대통령이 최다 의석 집단에서 총리를 임명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지 않다. 그러나 이전까지는 계속 그렇게 해 왔다.

구실을 만들기 위해 마크롱은 파시스트 정당인 국민연합(RN)의 지도자들과 회담했다. 그들은 좌파가 총리를 맡으면 즉시 총리 불신임안을 제출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마크롱은 자기 당 의원들에게 그런 불신임안을 지지하지 말라고 지시할 수도 있음에도 그러지 않았다.

신민중전선에 속하는 좌파 정당 '불복하는 프랑스'(LFI)의 전국 간사 마뉘엘 봉파르는 마크롱의 행동을 "반(反)민주주의적 쿠데타"라고 불렀다. LFI의 지도자 장뤽 멜랑숑은 대통령 탄핵안을 발의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상하원 모두에서 3분의 2 이상의 표가 필요해, 통과될 가능성은 낮다.

이제 프랑스 언론은 마크롱이 친기업 인사를 총리로 기용할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르노 회장인 장도미니크 세나르, 보험회사 마이프의 최고 경영자인 파스칼 디뮈르제르 등이 물망에 오르고 있다.

프랑스 지배계급은 이 상황을 어떻게 헤쳐 나갈지 확신하지 못하고 있다. 긴축을 강요할 정치적 동맹을 안정적으로 꾸리는 것은 어려운 일이지만, 그렇다고 총리가 없다는 불확실한 상황이 언제까지나 계속되도록 놔둘 수도 없다.

발목

신민중전선 역시 마크롱과 맺은 선거 협약의 논리에 발목이 잡혀 있다. 신민중전선은 7월 결선 투표 때 많은 선거구에서 마크롱 측 후보들의 당선을 위해 거래를 했었다. 이제 신민중전선 지도자들은 그럴 것이 빤히 예상됐던 정책을 마크롱이 펼치는 것을 보며 투덜투덜대고 있다.

카스테트는, 신민중전선에서 가장 오른쪽에 있는 세력인 사회당에 친화적이고 유순한 전문관료이다. 그런 그녀를 신민중전선이 총리 후보로 세운 것은 자신들이 "합리적"임을 보이고 "중도" 정당들의 심기를 거스르지 않으려는 것이었다.

그러나 마크롱은 가장 미미한 좌파 강령조차 지지하려 하지 않는다. 그는 돈을 군대에 쓰기를 바라지 복지나 공공 서비스에 쓰기를 바라지 않는다. 또한 마크롱은 프랑스 기업주들에게 노동자들의 생활 수준과 권리를 공격하는 전쟁을 약속했다.

〈르몽드〉는 이렇게 보도했다. "에마뉘엘 마크롱과 그의 사람들에게 '모든 개혁의 어머니,' 즉 연금 개혁을 문제삼을 정부를 임명한다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이 교착 상태를 돌파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투쟁이지, 의회 내 책략이 아니다. LFI는 이제 "민주주의 존중을 위한 행진을 제안"하고 있다. 대중을 크게 동원해야 하고 작업 중단 지침을 내리도록 노조 지도자들을 압박해야 한다.

그러나 선거는 7월 7일이었다. 멜랑숑은 선거 직후부터 행진과 파업을 호소할 수도 있었다. 그러나 그는 올림픽을 위한 "휴전"을 받아들였고 마크롱이 이것저것 떠들고 다니도록 방치했다.

이후 멜랑숑은 마크롱이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자 뒷걸음질치면서, 카스테트를 총리로 하고 LFI는 장관직을 일절 맡지 않는 정부를 마크롱에게 제안했다.

이 모든 것은 좌파가 성과를 내기 힘든 선거 연합에 갇히고 전투적 동원에서는 멀어지도록 만들었다.

찰리 킴버

출처 Charlie Kimber, 'French president Emmanuel Macron plots to keep a pro-boss government' (2024. 8. 28) / 번역 김종환

마크롱은 파시스트 르펜의 국민연합이 반대한다는 이유로 신민중전선의 총리 후보 임명을 거부했다

▶ 10면에서 이어짐

그 전쟁으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고 서방 정부들은 거기에 책임이 있지만 서방의 범죄 행위는 은폐되고 있습니다.

"대외적으로 전쟁 정책을 강화하고 국내에서 추방 정책을 강화해 더 많은 난민을 실업과 절망으로 내모는 것으로는 그런 공격을 막지 못할 것입니다."

독일 사회주의자 티모 쾨니히는 이렇게 썼다. "부르주아 정치인들의 반응은 순도 100퍼센트 인종차별입니다. 그들은 거의 만장일치로 이주민 유입이 칼부림을 낳았다고 가정합니다. 그럼으로써 공포를 부추기지만 그로부터 이득을 얻는 것은 AfD뿐입니다.

"다음 몇 주가 결정적일 것입니다. 파시스트들이 거리에서 졸링겐 공격을 이용하며 '독일인들이 절멸 위기에 처했다'는 허황된 소리를 하려 할 때마다, 우리는 규모 있고 단호하게 맞서야 합니다.

"파시스트 위협을 막으려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이 결정적으로 중요합니다. 동시에 우리는 집권 연정과 기민당의 정책들에 반대해야 합니다."

8월 31일(토), 수천 명이 튀링겐의 주도 에르푸르트에서 AfD를 파시스트라고 비난하는 행진에 나섰다.

연초 AfD는 베를린 언저리 호숫가의 한 저택에서 가진 비밀 모임이 폭로돼 큰 타격을 받았다. 그 모임은 독일 인종이 아닌 이들을 대대적으로 추방하는 방안(독일 시민권자까지도)을 논의했다.

그 모임에서 AfD 고위 인사들은 공공연한 나치들과 [극우인] '정체성 운동' 구성원들을 만났다. 그들은 "외국 배경을 가진" 사람들을 제거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이것이 폭로된 직후 수십만 명이 반파시스트 집회에 참가했다.

이후에는 AfD 정상급 정치인 막시밀리안 크라가, 나치 친위대(SS)에 속했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범죄자"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망언을 했다.

그럴 때마다 AfD는 수세에 몰린다. 그러나 사회가 위기에 빠져 있고, 권력 핵심부에서 인종차별을 부추기고, 투쟁과 인종차별에 반대하는 좌파가 충분히 크지 못한 상황 탓에 번번이 다시 살아나고 있다.

출처 Charlie Kimber, 'A warning from Germany: fascists top poll in state election' (2024. 9. 01) / 번역 김종환

러시아 본토 침공으로도 우크라이나가 불리한 전세는 뒤집지 못하고 있다

우크라이나군이 2024년 8월 6일부터 개시한 러시아 본토 쿠르스크 주 공격 작전이 한 달 가까이 되고 있다.

우크라이나 대통령 볼로디미르 젤렌스키는 "적[러시아]이 가져온 전쟁을 그들의 땅으로 돌려보냈다"고 말했다.

나토 사무총장 옌스 스톨텐베르그는 쿠르스크 진격을 우크라이나의 "자위권"이라며 지지했다. "[쿠르스크의 러시아 군인, 탱크, 기지는] 국제법상 합법적 표적이다."

우크라이나군 총사령관 올렉산드르 시르스키는 8월 15일 현재 1150제곱킬로미터의 러시아 영토를 점령했다고 주장했다.

서방 언론들은 우크라이나군의 쿠르스크 진격 초반에 이제 전쟁의 양상이 바뀌고 있다고 호들갑을 떨었다.

젤렌스키가 밝힌 쿠르스크 공격의 목표는 두 가지다.

첫째, 러시아의 추가 공격을 차단하기 위해 완충 지대를 형성하겠다는 것이다. 우크라이나 대통령실 보좌관 미하일로 포돌랴크는 "공정한 평화협상 조건을 갖추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군의 쿠르스크 공격은 그 목표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 러시아 정부는 "협상 불가"를 공식 선언했다. "우크라이나가 완전히 패배할 때까지 평화 협상이 열리지 않을 것이다."(국가안보회의 부의장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워싱턴 포스트〉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카타르의 중재로 에너지 · 전력 기반 시설에 대한 상호 공격 중단을 협상할 계획이었다고 보도했다(8월 17일 자). 〈워싱턴 포스트〉는 이 협상이 타결된다면 부분 휴전 효과를 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군의 쿠르스크 침공은 이런 시도에 찬물을 끼얹었다.

물론 푸틴 정부가 우크라이나와 함께 협상 테이블에 앉을 수 없는 것은 단지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 영토를 침범했다는 사실 때문만은 아니다. 정치적 · 역사적 이유가 중요하다. 쿠르스크는 여느 지역이 아니다.

쿠르스크는 1943년 7~8월에 제2차 세계대전에서 가장 중요한 전투가 벌어진 지역이다. 스탈린그라드 전투에서 참패해 수세로 몰린 나치 군대는 7월 5일 쿠르스크에서 반격을 시도했다. 사상 최대의 기갑전이었던 쿠르스크 전투에서 나치 군대는 약 40만여 명의 사상자를 내고 1000여 대의 탱크와 700여 대의 전투기를 잃으면서 동부 전선에서 재기 불능에 빠졌다.

사진 출처 우크라이나군

계속되는 소모전 8월 20일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 공습 장면

그로부터 81년 뒤, 미국 등 서방은 우크라이나군이 (미국과 독일 등이 제공한 장갑차와 탱크 들을 앞세워) 쿠르스크로 진격하면 러시아가 협상에 나서게 될 거라는 장밋빛 전망을 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쿠르스크 진격에 당황하고 굴욕감을 느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전쟁의 저울이 우크라이나 측으로 기운 것은 아니다.

우크라이나군의 쿠르스크 작전의 또 다른 목표는, 러시아군이 최근 몇 달 동안 꾸준히 진군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동부에서 러시아 병력의 힘을 빼려는 것이었다.

그러나 러시아는 서아프리카에서 활동하는 러시아 용병들을 쿠르스크로 보냈다. 우크라이나 동부 전선 병력은 그대로 유지한 채 다른 전선의 자원을 재배치한 것이다. "러시아가 상황을 파악하고 미끼를 물지 않았다."(〈이코노미스트〉, 8월 22일 자)

러시아군은 지난달 30일 우크라이나 동부 도네츠크의 코스티안티니우카와 노보젤란네, 하르키우의 신키우카를 "해방했다"고 주장했다(AFP통신, 9월 1일 자). 노보젤란네는 러시아군이 포크로우스크로 진군하는 과정에서 점령한 마을이다.

포크로우스크는 우크라이나군의 동부 보급 및 수송 거점이다. 이 지역이 점령당하면 드니프로와 자포리자 같은 주요 도시들이 뚫릴 수 있다.

한 우크라이나 군인은 이렇게 말했다. "솔직히 나는 이런 상황을 본 적이 없다. 모든 것이 빨리 무너지고 있다. … 포크로우스크는 바흐무트보다 훨씬 더 빨리 무너질 것이다."(〈파이낸셜 타임스〉, 8월 30일 자) 바흐무트는 6개월 이상 진행된 동부 전선의 최대 격전지로, 러시아군이 지난 7월에 장악했다.

핵 교리

쿠르스크 진격이 애초 우크라이나 정부가 의도한 대로 러시아 본토에 "완충 지대"를 만드는 데 성공할지, 아니면 처참한 실패로 끝날지는 현재로서는 알 수 없다. 또, 러시아가 언제 포크로우스크를 점령하게 될지도 현재로서는 알 수 없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점이 있는데, 그것은 수많은 사상자가 나오고 도시가 폐허로 변하고 많은 민간인들이 피란길에 오르지만 어느 편도 승리의 쐐기를 박지 못한 채 소모전이 지속될 것이라는 점이다.

우크라이나군의 쿠르스크 진격은 미국 등 서방 정부가 군사 개입을 확대하도록 "압박"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 미국 대선에서 누가 이기든지 간에, 미국 · 독일 · 영국이 제공하는 무기들로 러시아 본토 깊숙한 곳까지 공격을 허용해 달라는 것이다. "러시아 군 비행장, 기지, 러시아 테러의 병참 시설을 타격해야만 [러시아의 치명적 공격을] 피할 수 있다."(젤렌스키)

그러나 바로 이런 식으로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지는 제국주의 간 전쟁이 매우 위험한 역학을 드러내고 있다.

9월 1일 러시아 외무차관 세르게이 랴브코프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서방의 도발 확대에 대응해 핵 사용 문턱을 낮추는 방향으로 관련 교리를 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진작에 푸틴은 "러시아 국가의 존립이 위협받으면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 공언했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러시아 영토로 확대되는 것을 원치 않았다. 러시아를 피 흘리게 하고 약화시키고 싶지만 핵전쟁은 피하려 한 것이다.

그러나 〈파이낸셜 타임스〉 외교 문제 수석 칼럼니스트 기디언 래크먼은 이렇게 지적했다.

"미국은 여전히 러시아와의 직접적인 충돌을 피하고 핵 충돌의 위협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그러나] 미국과 그 동맹들은 러시아의 레드 라인을 존중하기보다 레드 라인을 서서히 살금살금 넘어서고 있다. 점진적인 강화를 통해 푸틴이 어디까지 나갈 수 있는지를 시험하는 것이다.

"서방의 일부 분석가들은 쿠르스크 진격이 푸틴이 가해 온 핵 위협의 실체를 결정적으로 폭로했다고 생각한다. [영국 스코틀랜드 소재] 세인트앤드루스 대학교의 필립스 오브라이언은 러시아 본토 침공이 '항상 핵무기 사용의 마지막 레드 라인으로 여겨져 왔다. 그리고 우크라이나군이 진군해 그 선을 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미국은 마지막 레드 라인을 넘는 데 성공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바이든의 보좌관들은 푸틴 정권이 완패당할 상황에 몰리면 러시아가 핵무기 사용에 의지할 수 있다고 여전히 생각한다. 우크라이나는 승리할 수 있다는 생각을 동맹들이 두려워한다고 불평하는데, 일리가 있는 말이다."(8월 26일 자)

핵 카드를 상대에 대항할 수 있는 패로 만지작거릴 만큼 제국주의 간 경쟁이 계속 악화되고 있다.

김인식

극우화 재개하자마자 터진 윤석열 정권의 계엄 검토 의혹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정부의 유사시 계엄 준비 의혹을 제기했다. 진지함을 보이려고 9월 1일 국민의힘 대표 한동훈과의 여야 대표 회담 모두 발언에서 그랬다.

대통령실은 즉각 "거짓 선동"이라고 반박했다. 회담 때 침묵한 한동훈은 다음 날 "국기 문란"이라며 이재명을 비난했다.

9월 2일 오후에도 대통령실은 계엄설이 "나치, 스탈린, 전체주의 선동정치," "괴담," "날조," "탄핵 빌드업"이라며 맹비난을 퍼부었다.

민주당이 윤석열의 계엄 준비 의혹을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8월 중순에 대통령 경호처장 김용현이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자, 한미연합사령부 부사령관을 지낸 육군 대장 출신 민주당 최고위원 김병주가 군 친정 체제 구축을 통한 (의회 탄핵 사태에 대비한) 계엄 준비 의혹을 제기했다.

정권 실세인 김용현뿐 아니라 방첩사령관(여인형), 777사령관(박종선)이 모두 윤석열의 충암고 선후배로 구성된 것이 의심을 키우고 있다. 777사령부는 국방부의 국방정보본부 직할 첩보부대로 그 활동은 베일에 싸여 있다.

9월 2일 김용현의 국방부 장관 후보 인사 청문회에서는 국가정보원 제1차장 출신인 민주당 의원 박선원이 또 다른 의혹을 제기했다.

최근 김용현이 한남동 공관에서 수도방위사령관, 특전사령관, 방첩사령관과 비공개로 회동을 했다는 것이다. 박선원은 여기서 계엄 논의를 했느냐고 김용현을 추궁했다.

논란에서 반복해 등장하는 방첩사령부(옛 기무사/보안사)는 박근혜 때도 계엄 문건을 작성했던 곳이다.

대통령실과 김용현은 의혹을 부인하지만, 군 최고위 장성 출신, 국정원 최고위 간부 출신의 의혹 제기는 그냥 보아 넘기기가 께름칙하다.

여권은 박근혜 탄핵 국면의 계엄 모의 의혹도 재판에서 무죄가 나왔다며, 이번 의혹 제기도 좌파의 거짓 선동이라고 반발한다.

그러나 당시의 계엄 모의가 재판에서 무죄가 나온 이유는 쿠데타 모의가 검토 단계에서 끝났기 때문이다. 그래서 당사자들이 모두 혐의를 부인하자 증거 부족으로 수사가 더 진전하기 어려웠다.

사진 출처 대통령실

윤석열이 반국가 세력에 대한 항전 운운한 것은 유사시 계엄 검토를 염두에 둔 것일 수도 있다

특히, 계엄 모의를 주도한 기무사령부의 전현직 사령관(현 방첩사령관) 2인 중 한 명은 자살, 또 한 명은 미국 도피로 수사 자체가 멈췄다.

당시 기무사령관 조현천이 유유히 해외로 도피할 때 검찰 측 수사 책임자가 바로 당시 서울지검장 윤석열이었다. 적폐 수사로 인기가 높던 윤석열도 군부에 대한 수사는 애초 의지가 없었던 것이다.

박근혜 탄핵 당시에 지배계급은 행여나 대중의 박근혜 퇴진 운동이 걷잡을 수 없는 수준으로 발전할까 봐 합법적이고 질서정연한 절차인 탄핵으로 박근혜만 제거해 정치 체제 전체를 구하는 선택을 했다. 그것은 당시 개혁주의 지도자들의 온건함과 소심함 덕분에 지배계급에 유리한 선택이 됐다.

정치 위기

윤석열 정권의 핵심부와 군부가 탄핵 등에 대비해 실제로 계엄 검토를 했다면 이는 군부에 의한 친위 쿠데타를 고려 사항에 포함시키고 있다는 뜻이다.

본지는 윤석열이 취임 초에 대통령 집무실을 국방부 청사로 이전하는 것이 군부 · 기업인들과 더 유착하려는 포석이며, 안보 태세를 강조함과 동시에 대중 저항으로 몰락한 박근혜 정부의 전철을 밟지 않으려는 의지의 투영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바로 그 집무실 이전의 주도자이자 책임자인 김용현이 국방부 장관 임명을 앞두고 유사시 계엄 검토 의혹의 중심에 있는 것이다.

지금 주요국들의 정치 위기가 (그 정부들의 작동과 정당성 면에서 모두)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이 맥락에서 정치 양극화가 벌어지고 특히 극우가 부상하고 있다.

한국 지배계급도 지금 윤석열 정부를 통한 개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대중도 정부에 대해 염증과 환멸을 키우고 있다.

이런 양극화 때문에 한국에서도 정치 위기 상황으로 행정부는 물론이고 국회(원내 정당들) 등의 공식 정치가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의 재극우화 행보와 동시에 계엄 검토 의혹이 제기된 것은 우연이 아닐 것이다.

누군가 유사시 계엄 검토 의혹을 흘린 것 자체가 반동을 멈출 탄핵 따위는 꿈도 꾸지 말라는 강한 의지의 표현일 수 있다. 그런 협박에 의존해야 할 만큼 정치 위기가 심각한 것이다.

공식 정치 한복판에서 친위 쿠데타 모의 의혹이 터져 나오는 것 자체가 정치적 모순이 커지고 있고 지배계급 일각에서 참을성이 줄고 있음을 반영한다.

민주당 지도부가 의혹을 터트린 것은, 윤석열의 운신의 폭을 좁히고 다음 선거까지 윤석열의 위기가 지속되길 바라며 상황 관리를 하려는 것일 게다.

이재명은 기업 살리기를 위한 협치 대화를 해 보자며 다른 한편으로는 "계엄 의혹 제기"라는 견제구를 던져 지배계급과 개혁 염원 지지자들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고 있다.

그러나 윤석열은 9월 들어 딥페이크 · 가짜뉴스에 대한 패닉을 북한의 안보 위협과 연결시켜 사찰 · 검열 강화, 국가보안법 탄압을 개시했다. 한미일 군사동맹 추진 속도를 높이고, 경제 위기 고통 전가 공격 본격화도 공언하고 있다.

민주당에 의존하지 말고 독립적으로 정부와 기업주들에게 저항할 태세를 갖춰야 한다.

김문성

youtube.com/c/노동자연대TV
마르크스주의 관점으로 당신의 눈을 여는 채널
노동자연대 TV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다양한 주제의 토론회 영상
주요 시사 이슈 팩트부터 논쟁점까지
620여 개 콘텐츠 체계적 분류
팔레스타인인들과 연대를 저항, 역사, 전망
현대 중국의 모든 것 12강
기후 위기! 체제를 바꾸자 10부작
지금 구독하세요! 새 콘텐츠 소식을 보내 드립니다.

위기의 자본주의에 대한 마르크스주의적 대안을 제안하는
노동자연대 가입하세요
문의: 02-2271-2395
ws.or.kr/join
ws.or.kr/what-we-stand-for
기본입장

피로 물든 친미 우익 독재자 이승만

김현옥 고등학교 역사 교사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건국 행사에 초대된 맥아더와 이승만. 제주 4·3 항쟁을 짓밟으며 세운 정부를 축하하고 있다

뉴라이트와 우파의 이승만 띄우기가 한창이다. 그들은 왜 이승만을 찬양할까?

우선, 그들은 이승만에 의해 세워진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수립'을 강조한다.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1945년 해방이 아니라 1948년 건국에 두자는 것은 일제 강점기 친일파와 해방 후 미군정에 협력했던 자들에게 면죄부를 주자는 주장이다.

얼마 전 뉴라이트인 안병직 서울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조선일보〉 인터뷰에서 "일제 시대에 성장한 지식층을 전부 친일파로 단죄한다면, 해방 이후 누가 국가 경영을 맡을 수 있었겠니" 하고 반문하며 "친미와 친일이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든 힘"이라고 노골적으로 말했다.

이런 주장은 해방 후 미군정이 친일파를 등용한 논리이자, 이승만이 분단 정권을 수립한 후 반민특위를 해체하고 친일파와 미군정에 협력했던 자들을 등용한 역사를 정당화해 준다. 그리고 이는 오늘날의 우파에게 정통성을 부여하는 것이다.

그러나 해방 후 민중의 열망은 정반대였다. 당시 여론조사에서는 압도적인 사람들이 장차 건설될 국가에서 '친일파가 배제'돼야 한다고 답했다. 또, 80퍼센트에 가까운 사람들이 새로운 국가가 "사회주의나 공산주의" 형태여야 한다고 생각했다.

해방 후 일본의 폭압적 지배 기구는 급속히 붕괴했다. 해방 당시 총독부의 조선인 경찰관 수는 8000명 정도였는데, 해방 직후 이들 중 대부분이 도주해 출근율이 20퍼센트도 안 됐다. 이런 상황에서 미군정은 식민지 통치 기구 자체를 부활시킬 뿐 아니라 과거 총독부 관료였던 사람이나 한민당 당원을 각 부서 최고직에 대거 임명했다.

해방 후 건국준비위원회는 빠르게 조직돼 13개도에 145개의 지부가 설립됐고 자치기구로서 기능하기 시작했다. 공업 부문 총자산의 90퍼센트를 차지했던 일본 자본가들이 도망간 공장에서 자주관리운동이 분출했다.

1945년 11월 4일까지 16개의 산별노조에 728개의 공장관리위원회가 구성됐다. 당시 노동조합 전국조직인 조선노동조합전국평의회(전평)의 남한 조합원 수는 1945년 말 25만 명 수준에서 1946년 5월 10일 기준 46만 7000명으로 폭발적으로 성장했다.

당시 미군정 사령관 하지가 남한의 정세를 '불만 댕기면 즉각 폭발할 화약통'에 비유했다. 그가 주한미군의 처지를 '금방이라도 폭발할 화산의 가장자리를 걷고 있는 형국'으로 묘사한 것은 미군이 제국주의 점령군으로 한반도에 진주했기 때문이다.

어쨌거나 그 만큼 상황은 혁명적이었다. 미군정은 이런 상황을 통제하려고 친일파를 등용하고 경찰 탄압에 의존해야만 했다.

미군정, 대한민국의 뼈대를 만들고 이승만과 손잡다

이승만은 맥아더가 제공한 비행기로 서울에 도착해 하지의 비호하에 5만 군중이 동원된 환영 행사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이승만은 공산주의자들을 격렬하게 비난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미군정이 1945년 12월 본국에 보내는 보고서에서 "한국인들은 이승만을 지지하고 있지 않다"고 걱정할 정도였다.

이승만은 귀국 후 군정이 통제하는 은행에서 자금을 지원받아, 재산을 몰수당할 가능성이 컸던 사람들을 보호해 줬고, 경찰 고위 간부들과 긴밀히 연합해 남한 전역에서 좌파 세력을 탄압하는 데 동조했다.

뉴라이트와 우익들은 북한에서 1946년 2월 초 사실상의 국가기구인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가 먼저 수립됐으므로, 단독 정부를 수립하자는 1946년 6월 이승만의 정읍 발언은 정당하다고 한다. 그러나 사실 단독 정부 수립은 남북이 누가 먼저랄 것도 없었다. 박명림 교수는 "미군정의 국가기구 창설 노력은 1945년에 이미 그 초기적 준비가 완료됐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승만의 정읍 발언은 1947년 냉전의 시작으로 알려진 트루먼 독트린과 함께 힘을 얻었다. 결국 1948년 5 · 10 총선거로 남한에 반쪽짜리 정부가 수립됐다.

뉴라이트와 우익들은 1948년 대한민국이 한반도에서 최초로 민주주의 선거에 의해 수립된 정부임을 강조한다. 그러나 당시 좌파뿐 아니라 중도파, 심지어 김구와 같은 우파조차도 남한만의 단독 선거인 5 · 10 총선거를 반대해 불참했다.

남한 단독 정부 수립은 제주도에서 항쟁과 유혈 진압을 거쳐야 했다. 5 · 10 총선거는 민주주의 선거이기는커녕 내전과 유사한 상황에서 진행됐다. 제주도민들의 저항으로 제주에서 선거가 제대로 치러지지 못하자, 건국운동 세력과 미군정은 선거를 물리적으로 보호한답시고 경찰 보조대인 향토보위단까지 조직했다.

그래서 뉴라이트 이영훈조차 "나라 만들기 그 자체는 본질적으로 총구를 앞세운 전쟁 과정"이고, "한국에서의 국민국가 만들기는 무척이나 폭력적인 과정"이었음을 인정해야만 했다.

얼마 전 고용노동부 장관 김문수는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서 "대한민국 건국을 반대한 4 · 3 폭동은 명백하게 남로당에 의한 폭동"이라고 발언해 논란이 됐다. 단독 정부 수립에 반대한 제주 4 · 3 항쟁을 깎아내려야 친일과 냉전을 합리화한 세력의 정당성이 확보될 테니 말이다.

결국 정통성 없는 이승만의 대한민국 정부는 여순 항쟁에 직면해야 했고, 국가보안법을 통해 강압적인 통치로 나아갔다. 이에 대한 불만은 한국전쟁 직전 1950년 5 · 30 총선에서 이승만의 참패로 나타났다.

식민지 근대화론을 주장하는 정안기가 최근 광복절에 맞춰 《테러리스트 김구》를 출간한 것을 보면, 뉴라이트가 이승만의 '대한민국 수립'의 정통성을 회복하기 위해 같은 우익인 김구조차 폄하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반공주의와 독재자 이승만

뉴라이트와 우익은 이승만이 1948년 8월 15일 남한만의 단독 정부를 세워서 공산주의의 팽창을 저지시켰다고 추켜세운다. 이승만이 미국과 동맹을 맺음으로써 대한민국의 자본주의가 확고하게 형성됐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것이다.

4 · 19 혁명으로 쫓겨난 독재자 이승만은 1991년 소련이 붕괴되고 냉전이 해체되면서 자본주의의 승리를 주장하는 세력들에 의해 재평가되기 시작했다. 2000년대 중반 이후 등장한 뉴라이트 역사관은 이를 더욱 강화했다.

이승만의 한미동맹 체결이 북한의 재침략 의지를 단념시키고 국가 안보를 공고히 함으로써 남한은 향후 경제

4·3 항쟁 때 심문을 위해 대기 중인 제주 주민들. 많은 수가 학살당했다

발전의 초석을 놓을 수 있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미 · 소에 의한 분단은 한국전쟁의 발발을 가져왔고 남북한 모두에서 권위주의 통치를 정당화했다.

한미동맹으로 한국 지배계급은 제국주의 국제 질서에 편승할 수 있었지만, 한반도는 냉전 제국주의 경쟁의 위험에 휘말렸다. 그 결과 한국은 베트남에 5만 명의 군대를 파병하기도 했다. 오늘날에도 경제 위기와 미 · 중 갈등 속에서 한미동맹의 강화는 한반도의 긴장과 위험을 더욱 고조시키고 있다.

뉴라이트와 우익은 이승만이 경제 성장의 기초를 마련했다는 점 또한 강조한다. 특히 1950년 농지개혁으로 지주제를 해체하고 지주의 손을 떠난 지가증권이 산업 자본 육성에 활용됨으로써 한국 자본주의를 태동시켰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대표 한동훈도 작년에 개봉된 영화 〈건국전쟁〉에서 이승만의 농지개혁을 극찬한 바 있다.

물론 한국전쟁을 전후로 진행된 농지개혁은 지주를 소멸시키고 공업화의 조건을 만드는 데 일조했다.

그러나 유상몰수 · 유상분배 방식의 농지개혁으로 농민들의 삶은 나아지지 않았다. 농민들은 땅을 분배받는 대가로 연간 수확량의 30퍼센트를 5년 동안 분할 상환해야 했다. 소작농의 상당수가 땅을 분배받지 못하고 농촌을 떠나 도시 빈민이 됐다.

이승만은 미군정이 관리하던 적산(일제와 일본인들이 남기고 간 재산, 여기엔 공장 등 산업 시설도 포함된다)을 민간에 헐값으로 매각해 특정 기업에게 혜택을 줬다. 그들이 재벌로 성장했다. 이승만은 농민과 노동자들의 희생 위에서 자본주의의 기초를 놓았던 것이다.

일제 강점기에 이승만은 조선인들의 자력 독립 가능성에 회의적이었다. 아래로부터의 독립운동을 경멸했고, 미국의 제국주의적 힘을 빌리려는 외교 노선을 견지했다.

러시아 혁명으로 급진화된 분위기 속에서 3 · 1운동과 무장 독립 투쟁이 전개될 때, 이승만은 미국의 윌슨 대통령에게 한국을 국제연맹의 위임 통치 아래 둬 달라고 청원하고 있었다.

이런 굴욕적인 행위는 독립 운동가들의 반발을 샀고 이승만은 1925년 상하이 임시정부 대통령에서 탄핵당했다.

미군과 우익, 친일파의 도움으로 진짜 주권국가의 대통령이 된 이승만은 1960년 4 · 19 혁명으로 자리에서 물러났고 아예 한국 땅을 도망치듯 떠나야 했다. 이승만은 건국의 아버지가 아니라 민중에 의해 쫓겨난 독재자다.

우리의 기본 입장 해설 17

중국 국가자본주의와 마오쩌둥 시대

1949년 10월 1일 마오쩌둥은 중국 공산당 지도자로서 중화인민공화국 수립을 선포했다. 마오쩌둥은 "중국 인민이 일어났다!" 하고 선언했다.

한 세기 넘게 이어진 제국주의의 속박이 끝났고, 세계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나라가 수십 년의 분열을 끝내고 통일됐다. 공산당은 옛 지배자들에 비해 평범한 중국인들과의 거리를 좁혔지만, 그렇다고 딱히 더 민주적이지는 않았다.

진정한 선거는 없었고, 노동자는 공장을 통제하지 못했고 농민은 농촌을 통제하지 못했다. 마오쩌둥의 혁명은 자립 경제를 이루기 위한 것이었지, 노동자들의 자력 해방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 도농 간의 불평등은 계속됐는데 정부가 공업화를 위해 농업을 착취하는 정책을 폈기 때문이다.

"자립"을 이룬다는 것은 마오쩌둥 경제 정책의 핵심이었고, 성장하는 세계 자본주의 속에서 중국의 힘을 입증하겠다는 마오쩌둥의 목적과 관련이 있었다. 이는 스탈린이 소련에서 내세운 일국사회주의 구상과 닮아 있었다. 즉 노동자 착취를 통해 빠르게 산업화를 이뤄 서구와 경쟁할 수 있는 자립 경제를 건설하려 했다.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SWP) 창립자의 한 명인 토니 클리프는 1957년에 이렇게 썼다. "마오쩌둥의 중국에서 경제 및 정치 발전을 통째로 관통하는 것은 바로 엘리트층이 인민을 떠밀어 거대한 경제-군사기구를 만들려 갖은 노력을 기울인다는 것이다. 후진적이고 협소한 농업 기반 위에서 말이다."

끔찍한 착취

1958년 공산당은 각지의 농민들을 거대한 '인민공사'로 몰아넣었다. 인민공사 중 규모가 큰 것은 3만 명에 달했다. 그리고 마오쩌둥은 "대약진 운동"을 시작한다고 선언했다. 공산당은 밤낮으로 일하는 농민들에게 강도 높은 노동을 강요하며 공업 확대를 꾀했다. 농민들은 하루에 최대 18시간까지 일했다.

정부 관료 마키는 이렇게 시인했다. "농장 생산 증가분의 많은 부분은 극단적인 노동 강도 때문이다. 남녀노소 모두 밤낮으로 '처절한 전투'를 벌이고 있다."

대약진 운동은 대기근으로 전락했다. 1961년이 되면 3000만 명이 기아로 목숨을 잃었다. 수천만 명이 풀이나 나무뿌리로 연명해야 했다.

마오쩌둥은 중국 경제를 약진시키는 데에 실패했다. 그는 공산당 내에서 정치적으로 밀려났지만, 공산당 지도부는 마오쩌둥의 신속한 공업화 전략 외에 대안이 없었다.

이후 1966년 문화혁명을 시작하며, 마오쩌둥은 공산당에 대한 통제권을 되찾았다. 그는 공산당 내 정적을 제거했지만 반복해서 닥치는 위기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마오주의 국가는 국제적으로 다른 자본주의 국가들과 경쟁해야 했고 그래서 중국 민중을 계속해서 착취했다.

개혁·개방

마오쩌둥은 1976년에 죽었고 그를 계승한 덩샤오핑은 1978년 12월부터 1989년 11월까지 중국을 이끌었다.

덩샤오핑은 시장 세력이 급증하도록 허용했고 그 결과 경제가 더 역동적이 됐고 시장 자본주의를 닮아 갔다. 더 많은 이윤을 낳기 위해 착취가 늘었고 민간 기업 활동이 권장됐다.

그러나 이런 새 전략 역시 중국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서는 마오쩌둥만큼이나 무능했다. 1989년이 되면 중국은 사회적 · 경제적 위기에 빠졌다. 농촌 공장들이 문을 닫으면서 수백만 명이 실업자가 됐고, 지방정부들은 농민에게 생산물의 대금을 지불할 돈이 바닥났다.

중국은 1949년 스탈린주의를 본떠 건국됐고 지금도 국가자본주의 사회다.

민간 기업이 경제에 참여하고 국제 경쟁을 위한 생산에 대규모로 나선 결과 중국은 이제 세계에서 10억 달러(1조 원) 이상을 소유한 부자가 가장 많은 나라가 됐다(2024년 1월 기준 814명). 또한 중국은 제국주의 프로젝트를 계속 추진하고 있다. 중국의 일대일로 사업은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 확대를 꾀한다.

중국에서 노동자들은 계속 반격에 나서고 있다. 2022년 11월 정저우시(市)에서 폭스콘 아이폰 공장의 노동자들이 임금 체불에 맞서 파업에 나선 것은 중국 노동자들이 착취당하지만 여전히 저항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 노동자들은 착취당하는 현실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는 존재가 아니고, 중국의 역사는 노동자들만이 사회주의 혁명을 이룰 힘이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

이 글은 본지의 기본 입장을 해설하는 기획 연재의 열일곱 번째 글이다(QR 코드로 전체 연재 보기). 다음 연재에서는 북한 사회의 성격에 관해 다룰 것이다.

노동자 연대 ws.or.kr
Workers' Solidarity "만국의 노동자여, 단결하라!"
새로운 온라인 기사들이 수시로 업데이트됩니다.

독자·지지자들의 구독료와 후원으로 발행하는 좌파 주간 신문을
정기구독/후원하세요
ws.or.kr/subs2

이스라엘은 서안지구에서도 인종 학살을 벌이고 있다

김인식

이스라엘이 8월 28일(이하 현지 시각)부터 서안지구에서 군사 작전을 벌이고 있다.

이스라엘군은 장갑차 · 전투기 · 드론 · 불도저를 동원해 서안지구의 북부 도시들(제닌 · 툴카름 · 투바스 등)을 공격했다.

이스라엘군은 처음에 서안지구 북부와 요르단강 계곡 지역을 공격했지만 지금은 서안지구 남부로도 공격을 확대했다.

2002년 제2차 인티파다 이후 이스라엘군이 서안지구에서 벌인 최대 규모의 작전이다.

이스라엘 외무장관 이스라엘 카츠는 서안지구 공격을 "모든 면에서 전쟁"이라고 말했다. 이번 공격으로 사망한 팔레스타인인들은 9월 1일 현재 적어도 24명이다.

이스라엘 카츠는 팔레스타인인들을 서안지구 북부에서 강제로 대피시킬 것을 군대에 촉구했다. 이스라엘군은 "자발적 대피"를 촉구했다.

강제적이든 자발적이든 "대피"는 가자지구의 운명이 보여 주듯 서안지구에서도 대규모 파괴와 대량 피란민이 발생할 수 있음을 뜻한다.

이스라엘은 서안지구의 무장 단체들을 표적으로 삼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벌이는 이번 군사 작전의 주요 목표는 서안지구 파괴와 인종청소다. 이스라엘군은 고의적으로 난민촌을 공격하고 수도관 · 전기 시설 등 기반 시설을 파괴하고 있다.

이스라엘군은 저항 투사들과 민간인들을 살해할 뿐 아니라, 공격받은 팔레스타인 지역사회들의 기반 시설을 불도저로 밀어 버려 공동 처벌(소위 연대 책임 지우기)을 자행하고 있다.

사진 출처 Wahaj Bani Moufleh / Activestills

이스라엘은 모든 팔레스타인인을 몰아내려 한다. 8월 16일 정착민에 의해 사망한 서안지구 청년의 장례식

이스라엘은 가자지구 전쟁을 서안지구로 확대하고, 서안지구도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으로 만들어 팔레스타인인들을 모두 고향 집에서 쫓아내려고 한다.

카타르의 도하대학교 연구소 모하마드 엘마스리 교수는 이렇게 지적했다. "이스라엘의 계획은 팔레스타인 땅을 병합하고 결국 시간이 지나 팔레스타인 주민들을 제거하고 서안지구와 가자지구에서 인종청소를 하는 것이다." (알자지라, 8월 30일 자)

이스라엘은 군대와 정착자들의 공격 같은 직접적인 수단을 통해, 그리고 팔레스타인인들의 삶을 완전히 망가뜨리는 간접적인 수단을 통해 팔레스타인인들을 서안지구에서 점진적으로 몰아내는 전략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가자 전쟁에 대한 미국의 태도를 보면서 이스라엘은 대담해졌다. "가자지구에서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서안지구에서 못할 이유는 뭔가?"(알 자지라, 8월 30일 자)

서안지구 팔레스타인인들의 무장 저항

이스라엘은 서안지구를 공격해 팔레스타인인들이 이스라엘의 점령에 저항하면 치러야 할 대가를 상기시키려 한다.

유엔 인도주의 업무조정국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7일 이후 서안지구에서 벌어지는 유사 전투로 인해 팔레스타인인들이 600여 명 사망했다.

이번 이스라엘군의 서안지구 공격이 시작된 이후 팔레스타인인 구금자 수는 70여 명에 이르렀다.

그전에도 이스라엘군은 지난 몇 년 동안 서안지구를 자주 급습하고 점령지의 무장 저항을 파괴하려고 애썼다.

이스라엘의 점령, 특히 정착자들의 폭력적 활동과 팔레스타인인 재산 강탈로 팔레스타인인들의 분노가 커져 왔지만 정작 점령지 서안지구를 관리하는 팔레스타인 당국(PA)은 이스라엘의 부역자 노릇을 해 왔기 때문에 서안지구에서 무장 저항 운동이 성장했다.

이스라엘은 군대만이 폭력을 휘두르는 것이 아니다. 이스라엘 정부는 이스라엘인 정착자들에게도 팔레스타인 지역사회를 공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UN에 따르면, 전쟁 첫 열 달 동안 이스라엘인 정착자들의 공격이 1250건 있었다. 그중 120건에서 팔레스타인인들이 사망하거나 부상당했고, 1000건에서 팔레스타인인의 재산이 피해를 입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서안지구 공격은 팔레스타인인들이 엄청난 학살에도 저항을 선택했음을 보여 주는 증표다.

미국은 휴전 중재자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공범이다

미국 대통령 조 바이든은 네타냐후가 하마스와의 휴전 협상을 타결하는 데 충분히 제 역할을 하고 있냐는 기자의 질문에 "아니다" 하고 말했다.

그러나 미국도 이스라엘이 인종 학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의도적으로 협상을 지연시키고 있다.

지난해 10월 이후 공식적으로 1만 7000명에 이르는 팔레스타인 어린이를 살해한 이스라엘에 미국은 200억 달러의 추가 무기 이전을 승인했다.

미국은 외관상 가자지구 휴전 협상을 중재하는 듯하지만 실은 교전국이나 다를 바 없다.

〈뉴욕 타임스〉는 미국이 이스라엘과 마찬가지로 하마스 지도자 야흐야 신와르를 찾기 위해 "막대한 자원을 쏟아부었다"고 보도했다. 이스라엘에 "지상 관통 레이더를 제공"했을 뿐 아니라 자국 정보기관들에 "신와르의 통신을 감청하는 임무"를 맡겼다는 것이다(9월 1일 자).

미국은 신와르 사살 또는 생포가 "[네타냐후로 하여금] 중요한 군사적 승리를 주장하고 잠재적으로 가자지구에서의 군사 작전을 끝내게 할 방법"이라고 믿는다(알자지라, 9월 1일 자).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 제이크 설리번은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방에 앉아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는 분명 고가치 표적을 사냥한 경험이 많다."

휴전 협상의 한쪽 당사자의 지도자를 "사냥"하는 국가는 결코 휴전 협상 중재자가 아니다.